



주간통일정세 2009-43(2009.10.19~10.25) 발행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주소 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우) 142-728  
전화 02) 900-4300 전송 02) 901-2547  
E-mail webmaster@kinu.or.kr http://www.kinu.or.kr

# 주간 통일정세

2009-43

##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3. 대남정세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 I. 북한동향

### 1. 대내정세

#### 가. 김정일 동향

##### ● 김정일, 묘향산유원지 시찰(10/25,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새로 건설된 묘향산 유원지를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5일 보도
- 김 위원장은 여러 시간에 걸쳐 하비로 입구부터 만폭동에 이르는 긴 구간의 참관 노정을 직접 답사하면서 유원지 건설 실태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한 뒤 향후 유원지 건설과 관리운영에 관한 과업을 제시했다고 통신은 전언
- 김 위원장의 시찰에는 김평해 평안북도 당 책임비서, 최태복 김기남 노동당 비서, 장성택 박남기 당 부장, 현철해 리명수 군 대장이 동행

##### ● 김정일, 자강도 희천 경제시설 시찰(10/25, 조선중앙방송)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자강도 희천시의 청년전기연합기업소, 희천제사공장, 희천공업대학 등을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25일 보도
- 김 위원장은 청년전기연합기업소의 생산시설을 둘러본 뒤 새로 건설된 도서관을 시찰하고 “컴퓨터망에 의한 열람은 경제적인 뿐 아니라 임의의 장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앞으로 도서관 운영을 정상화 함으로써 기술자들과 노동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끊임없이 높여 나가야 한다”고 강조, 김정일 위원장은 희천공업대학을 방문해 과학기술교육 강화를 촉구하기도 했다고 중앙방송이 소개
- 김 위원장의 현지지도에는 박도춘 자강도 당 책임비서, 김기남 당 중앙위 비서, 박남기 장성택 당 부장, 주규창 리제강 리재일 당 제1부 부장 등이 수행

##### ● 김정일, 평양 만수대거리 시찰(10/21,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평양 만수대거리에 새로 완공된 주택들을 돌아봤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1일 보도
- 김 위원장은 거리의 여러 곳을 돌아보면서 만수대거리의 살림집들이 “인민들 모두가 살게 될 살림집 건설의 본보기, 표준으로 된다”며 건설자들에게 감사를 전달했다고 통신은 전언
- 그는 평양시를 세계적인 도시로 꾸려나가기 위해선 “거리 형성과 도로 건설, 각종 건축물들의 배치와 형식을 특색있고 전망성있게



하며 고도의 인민성과 민족성, 현대성을 보장하는 원칙에서 교육, 보건, 체육, 문화후생시설들과 편의봉사시설들을 잘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

- 이날 현지지도에는 김기남 당 중앙위원회 비서,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 박남기 당 부장, 당 중앙위 제1부부장들인 주규창, 리제강, 리재일이 수행

● 北서 김정은 찬양가 만들어져(10/20, 르 피가로)

- “현재 북한에서는 김정일의 막내아들인 김정은에 대한 찬양가들이 만들어 지고 있다.” 프랑스 일간지 르 피가로는 20일 아르노 들라그랑주 기자가 최근 북한을 방문하고 쓴 르포 기사를 게재
- 이 기사에서 신문은, 현재 북한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사안은 김 씨 가문의 3대 세습 문제라면서 평양-베이징 간 기차 안에서 만난 북한 사업가의 말을 인용해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 문제(후계세습)에 대해 이야기한다”고 전언, 신문은 “김정은이 후계자로 지목된 것으로 보이며 이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도 찬양가와 함께 만들어지고 있다”고 소개
- 또 “김일성 주석은 여전히 공식 국가원수로 남아있다”면서 “2012년은 북한에서 모든 것의 기준점으로, 그 때까지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면 세계 첫 공산 왕조의 권력승계는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

● 서방외교관, 北주민들 ‘김정은 후계’ 알아(10/19, 연합)

- 북한의 일반 주민들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3남 정은이 후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청년 대장(Young General)’이라 부른다고 북한 내부에 정통한 서방 외교관이 19일 밝힘.
- 이 외교관은 이날 오후 서울주재 한 외국 대사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러나 북한 주민들은 이를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금지돼 있고 북한 관리들도 공식적으로는 김정은의 존재를 전적으로 부인하면서 현재 후계 구도에 관한 논의도 없다고 말하고 있다”고 덧붙임.
- 이 외교관은 부인하는 북한 관리에게 최근 대만 사진작가가 원산에서 찍어 인터넷에 공개한 김정은 선전 포스터 사진을 증거로 들이밀자 북한 관계자는 더 이상 부인하지 않고 김정은이 후계자라고 인정하면서도 “지금은 공개할 시점이 아니다”고 말했다면서 “후계자 공개 시점은 올 연말이 될 수 있고 2012년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

나. 정치 관련

● 北언론, 자본주의 향기에 현혹되지 말라(10/25, 노동신문; 민주조선)

- 노동신문은 25일 특히 신세대들이 “자본주의 향기로운 바람”에 물들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질 것을 촉구



- 민주조선은 25일 ‘자본주의 향기에 절대로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라는 제목의 논설을 통해 “제국주의 반동들은 혁명투쟁의 시련속에서 단련되지 못하고... 새것에 민감한 새세대 청소년들의 심리적 특성을 악용해 온갖 낡고 썩어빠진 부르주아 생활양식을 자본주의 ‘향기로운 바람’에 실려 대대적으로 침투시키고 있다”고 주장, 신문은 특히 “지금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 반동들은 우리나라에도 자본주의 향기로운 바람을 끊임없이 불어대면서 우리의 정치사상진지, 계급진지를 허물어보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 있다”며 “자본주의 향기로운 바람에 청년들이 현혹되지 않도록 준비시키는 문제는 그들의 운명을 구원하고 민족의 밝은 전도와 미래를 담보하는 매우 중대한 사업”이라고 강조

● 北, 유엔에 “공정한 국제질서 수립” 요구(10/24,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유엔의 날’인 24일 ‘유엔은 자기의 사명에 충실하여야 한다’는 제목의 글에서 유엔에 대해 “새 세기의 시대발전의 요구에 부합되는 새로운 공정한 국제질서를 수립”하는 “사명과 역할을 원만히 수행해야 한다”고 요구

● 北, 한미 군당국에 “남북관계 정상화 제동” 비난(10/24, 노동신문; 민주조선)

- 최근 한미간 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미국의 대한 확장억지력 제공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한 데 대해 북한은 24일 노동신문과 민주조선을 통해 “대화와 협력을 위한 우리의 성의와 노력에 군사적 조치로 대응해 나선 호전광들의 도발적 망동” 등으로 비난
- 민주조선은 특히 “핵무기로 동족을 해치려는 미국에 추종해야 전쟁밖에 초래할 것이 없다”며 “조선반도에서 새 전쟁, 핵전쟁이 터지면 남조선의 그 누구도 무사할 수 없다”고 위협하고 “남조선 당국은 이것을 명심하고 심사숙고해야 하며 미국의 장단에 춤추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
- 노동신문은 ‘긴장완화 분위기를 해치는 전쟁모의’라는 제목의 글에서 “확장억제력의 실현수단이 구체적으로 명문화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스쳐 지나갈 수 없는 매우 엄중한 사태”라고 규정

● 남북 정상회담 탐색속 北, 연일 당국대화 강조(10/22, 노동신문; 10/23, 조선신보; 10/3, 통일신보)

- 노동신문은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을 모색하는 남북 당국간 접촉설이 남한 언론을 통해 제기되는 것과 공교롭게도 때를 맞춰 22일 ‘북남선언 이행을 추동해야 한다’는 제목의 논설에서 “북남 사이에 여러 갈래의 대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 노동신문은 북한이 최근 “비정상적인 남북관계를 바로잡고 민족의 단합과 협력, 통일을 추동하기 위한 일련의 대범한 조치들을 취했다”며 현정은 현



대그룹 회장 방북과 공동보도문 합의, 추석 이산가족 상봉,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때 특사조의방문단 파견 등을 열거, 그리고 그 목적으로 “우리의 모든 노력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데로 지향되고 있다”고 강조

- 통일신보 10월 3일 ‘화해와 협력의 길에서 이룩된 성과’라는 제목의 글에서 남북관계가 “지난 1년반 동안 불신과 대결의 악화일로”를 걷다가 “다시 협력의 궤도에 들어서고 금강산에서의 뜻깊은 가족, 친척 상봉이 이루어지게 된 것”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숭고한 뜻과 의지가 낳은 사변”이라고 주장
- 북한이 남북 당국간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이유중 하나는 22일자 노동신문이 “우리의 모든 노력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데로 지향되고 있다”고 강조한 데서 드러난다.
- 조선신보도 이례적으로 23일 ‘조선의 언론들이 북남관계의 개선을 촉구’라는 제목과 ‘협력, 교류의 분위기 이어나가자’라는 부제로 노동신문, 민주조선 등 북한 매체들의 이같은 대남논조를 종합해 보도, 신문은 “조선의 국내 언론들이 북남 선언들에 따라 민족적 화해와 단합,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시켜 나갈 것을 호소하는 논조를 펴고 있다”며 “노동신문, 민주조선을 비롯한 신문들은 최근시기 북남사이에 대화와 협력의 분위기가 마련되어 가고 있다는 견해를 밝히면서 북남관계의 개선을 촉구하는 논설, 논평을 연일 게재하고 있다”고 보도

#### ● 전국선군시대 공로자대회 폐막(10/22, 조선중앙통신)

- 제2차 전국선군시대 공로자대회가 22일 폐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대회 참가자들은 이날 당·정·군 간부들과 기념촬영을 했음.

#### ● 조선신보, 北 행동계획, 핵군축과 연계 구상(10/21, 조선신보)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미국과의 양자회담 진전에 따라 6자회담을 포함한 다자회담을 진행할 용의를 표명한 가운데 북한은 “금후의 행동계획을 국제적인 핵군축, 핵철폐의 움직임과 연계시켜 구상”하고 있다고 조선신보가 21일 보도
- 신문은 ‘<조미 다음에 다자>, 합리적인 대화방식’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김영일 내각 총리가 평양을 방문한 원자바오 중국 총리에게 “조선반도 비핵화는 전 조선반도와 그 주변 나아가서 세계의 비핵화와 직결되어 있다”고 강조한 사실을 상기하면서 이같이 언급
- 신문은 북한에 있어 “비핵화 문제를 논의하는 1차 대상은 당연히 미국”이라며 북한이 핵을 포기하려면 “우선 두 나라의 교전관계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면서 “앞으로 진행되게 될 조미(북미) 회담의 성과 여부는 미국이 조선반도에 새로운 평화보장체계를 구축하는 길을 선택하는가 어떤가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지



적, 이에 대해 “평화협정이 체결되어야 비로소 조선(북한)이 종착점을 향해 전진할 수 있다는 의미로도 풀이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신문은 강조, 북미간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

- 신문은 이어 원자바오 총리가 베이징 한·중·일 정상회담 후 북한이 ‘한국, 일본과도 관계를 개선’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 “조선반도 비핵화가 주변지역 즉 동북아시아의 핵군축, 핵철폐와 직결된 문제라면 조선이 과거 6자회담에 참가한 나라들과 대화하는 것을 기피할 이유가 없다”며 “조미회담 하나만 개최되어도 모든 문제가 단번에 풀리지는 않는다. 지역에는 핵무기를 가진 나라가 따로 있고 미국의 핵우산 아래 있는 나라도 있다”고 말해 앞으로 북핵협상을 ‘핵군축 협상’의 성격으로 끌고 갈 것임을 시사

● **노동신문, 대결관념으로 주저하지 말아야(10/19,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9일 ‘대결관념은 낡은 시대의 유물’이라는 제목의 개인 필명 논설에서 남측에 대해 “대결관념에 사로잡혀 기회를 보지 못하고 주저한다면 북과 남은 언제 가도 화해하고 단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긴장이 더욱 격화”될 수 있다며 “대결관념을 버리지 않고서는 북남관계 개선도, 나라의 평화와 통일도 없다”고 주장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다. 경제 관련

● **국제적십자, 대북지원에 2년간 1천700만달러 배정(10/24, 미국의소리방송)**

- 국제적십자연맹은 2010년과 2011년 2년간 대북 지원사업에 1천752만 달러를 배정, 취약계층 지원과 상수도 개선 사업 등을 벌일 계획, 국제적십자연맹은 최근 확정된 ‘2010-2011 국가별 사업계획’에서 북한 주민들의 영양실조 방지와 보건의료 상황의 악화 방지를 위해 가장 취약한 계층 850만명에 대한 필수 의약품과 기초 의료 서비스 지원을 비롯한 대북 지원사업 계획을 밝혔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24일 보도

● **천리마, 경제관리 정보화 필요성 강조(2009년 9월호, 천리마)**

- ‘천리마’ 9월호는 ‘경제관리와 경영활동의 정보화’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생산과 경영활동의 효율성을 높여 당면 과제인 ‘경제강국’ 목표를 달성하려면 ‘경제관리와 경영활동의 정보화’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
- 잡지는 경제관리와 경영활동의 정보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컴퓨터를 비롯한 정보기술(IT) 수단을 확보하고, 통신시설을 현대화하는 등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 또 경제분야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산업을 발전시켜야 하며, 특히 계획, 통



계, 회계계산에 이용되는 경제계산 프로그램의 경우 국가적으로 통일시켜야 한다고 잡지는 강조

● **北관광당국, 재미교포 북한관광 환영(10/23,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의 집단체조 '아리랑' 공연기간에 방북한 미국인 관광단에 처음으로 미국 시민권을 가진 한인 여성 2명이 포함됐으며 북한 관광당국 관계자는 더 많은 재미교포들이 북한관광에 참여하길 희망했다고 미국의 북한관광 전문 여행사 대표가 밝힘.
- 미국 일리노이주에 있는 '아시아태평양여행사'의 월터 키츠 대표는 자유아시아방송(RFA)과 인터뷰에서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미국인 관광단을 이끌고 북한을 방문했었다며 "이번에 미국 시민권자인 재미교포 여성 2명을 처음으로 관광단에 포함시켰는데 북한 관광당국 관계자가 한인 동포의 방문을 언급하면서 다음부터는 더 많은 한인 동포들의 방북을 희망했다"고 전언
- 그는 또 평양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늘었다며 "이전과 달리 관광단을 안내한 3명의 북한 안내원 모두가 휴대전화를 갖고 있을 정도"였다고 설명하고 "관광안내원들은 운전중에도 수시로 휴대전화를 조작했는데 문자로 누군가와 대화하는 것 같았다"고 소개

● **中관광객 가장 선호하는 北기념품은 우표(10/21, 중국평론신문망(中國評論新聞網))**

- 북한을 관광하는 중국 관광객들은 기념품으로 북한의 우표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21일 중국평론신문망(中國評論新聞網)에 따르면 최근 북한을 방문하는 중국 관광객들 사이에 북한 우표 수집이 유행하고 있다고 전언
- 최근 북한을 방문했던 중국 관광객은 "허용된 곳 말고는 자유롭게 다닐 수 없는 데다 비싼 가격에 비해 품질이 좋은 상품은 거의 없다"며 "그나마 북한만의 특색을 잘 드러내는 것이 우표이기 때문에 가격은 좀 비싸지만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있다"고 답변

● **北, 가을철 국토관리사업 주력(10/19, 평양방송; 10/15, 조선중앙방송)**

- 북한이 국토관리총동원 기간(10~11월)을 맞아 도로 보수와 강·하천 정비 등에 주력, 평양방송은 19일 남포시 국토환경보호관리부 김복만 부부장의 말을 인용, 남포시는 당정이 "합심해 도로와 강·하천, 산림을 선군시대의 요구대로 꾸리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면서 평양-남포간 '청년영웅도로'를 비롯해 100km가 넘는 도로의 보수와 와우도와 대동강의 독공사 등을 "균중적 운동"으로 벌였다고 설명
- 조선중앙방송은 지난 15일 "각지 일꾼과 근로자들이 가을철 국토관리 총동원사업에 떨쳐나 짧은 기간에 여러 대상의 강·하천 제방공



사와 보수, 도로건설 및 정리, 거리와 마을 꾸리기를 비롯한 국토관리 전반 사업”에서 획기적 성과를 내고 있다고 말하고 특히 함경남도과 함경북도, 평양시에서 “강·하천 제방공사와 정리사업을 중요한 과제로 내세우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소개

#### 라. 군사 관련

##### ● 北, 이란 통해 시리아에 WMD기술 이전(10/23, 연합)

- 북한이 이란을 통해 시리아에 미사일을 비롯한 대량살상무기(WMD) 기술을 이전하고 있다는 주장이 22일 제기됨.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최근 발간한 ‘이란: 미국의 관심과 정책대응’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시리아에 다양한 형태의 WMD와 미사일 기술을 제공하는데 있어서 이란이 중개자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우려를 제기
- 또 이란의 재래식 무기 현황을 전하면서 이란이 북한에서 소형 잠수함을 도입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 보고서는 “이란은 수척의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북한에서 조립된 잠수함을 구입했거나 조립 부품을 구입했을 수 있다”고 지적
- 이 밖에 보고서는 이란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북한 등과의 군사분야 협력 관계는 주로 무기 구매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밝힘.

##### ● 北, 미얀마를 무기이전 중간기지로 활용(10/22, 연합)

- 북한이 미얀마(버마)를 무기 거래의 중간 기지로 활용하고 있으며, 북한의 주요 무기관련 회사가 최근 미얀마에서 매우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됨.
-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미국 하원의원은 21일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열린 미얀마 관련 청문회에서 미얀마가 안보상 미국에 위협을 주는 이유를 소개하면서 이같이 밝힘. 로이스 의원은 “우선 북한이 버마를 이용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무기와 금지품을 이전하기 위해 그곳(버마)의 항만과 소형비행장을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
- “또 버마가 핵프로그램에 이용될 수 있는 기술을 구매했다”면서 핵 커넥션 의혹을 거듭 제기, “그 다음 이유로는, 북한의 주요 무기 회사 중 하나가 최근 수개월간 버마에서 매우 활발히 활동해 왔다”고 주장, 그는 “마지막 이유로는, 핵관련 목적이 있다고 일부에서 말하는 (버마) 수도 인근의 광범위한 땅굴 건설에 북한이 도움을 주고 있다는 보도들”이라고 주장

##### ● 北핵시설 20곳에 전문인력 3천명 근무(10/22, 연합)

- 북한 내 핵시설은 모두 20개이고, 약 3천명의 전문인력이 근무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시





### ● 北에도 모바일 게임 인기(10/23, 조선신보)

- 북한에 휴대전화 보급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모바일 게임도 인기를 모으고 있음. 조선신보는 23일 “조선에서 3세대(3G) 이동통신봉사를 시작한 지 약 1년이 지났다”며 “손전화(휴대전화)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여가시간에 즐기는 오락프로그램도 국내 여러 단위에서 경쟁적으로 개발되고 있다”고 보도, 지난 16일 개막한 제20차 전국프로그램 경연 및 전시회에도 다양한 모바일 게임이 선보였음.
- 게임은 ‘류경장기’, ‘류경바둑’, ‘영어단어찾기’, ‘칙칙폭폭’, ‘잔디깎기’, ‘꼬마화가’, ‘오목’ 등으로 주로 지능형 게임임. 조선신보는 “손전화 오락은 작은 대면부(액정화면), 작은 기억용량의 이용, 적은 배터리 소모 등 손전화 단말기의 특성에 맞게 제작됐다”며 “그 내용을 보면 대다수가 장기, 바둑을 비롯한 지능놀이가 위주로 되고 있다”고 소개
- 조선컴퓨터센터에서는 앞으로 평양 시내 여러 곳에 설치된 소프트웨어제품 판매점, 정보봉사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오락프로그램을 판매할 계획

### ● 北, 국제합작 영화 제작 적극 추진(10/22, 조선신보)

- 북한이 지난 2월 ‘내각 위원회급’으로 신설한 국가영화위원회 산하에 국제영화합작사를 설치하고 외국 영화사와 영화합작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조선신보는 22일 “국가영화위원회 국제영화합작사가 외국의 영화업체들과의 합작을 염두에 둔 6편의 영화문학(시나리오)을 공개했다”며 “합작을 염두에 둔 영화문학의 소재에는 역사물이 많다”고 보도
- 조선신보는 “국제영화합작사는 6편의 영화문학에 흥미를 가지는 외국의 영화업체, 영화인들과 사업협조를 진행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소개, 신문은 또 “합작사는 과거에 공개된 3편의 영화문학과 관련한 계약을 이미 맺고 현재 (상)대방들과의 협조속에 영화제작 준비를 다그치고 있다”고 말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작품, 어느 국가의 어느 영화사들인지는 밝히지 않음.

### ● 北안변평야, 두루미 월동지 조성노력(10/21, 미국의소리방송)

- 북한 동해안 원산 부근의 안변평야를 국제적 멸종 위기 철새인 두루미의 안전한 월동지로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이라고 생태보존운동을 벌이는 미국의 비영리단체 ‘국제두루미재단’이 밝혔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21일 보도
- 재단은 2008년 방북해 안변 지역의 농부들에게 유기농법을 전수했고 중국으로부터 쌀 도정기기를 구입해 북측에 전했다며 5천~6천 그루의 과일나무도 지원했다고 밝힘. 농업 생산량 증대를 통해 북한 주민들의 식량 공급을 확대하고 두루미들에게도 먹이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려는 조치였다고 설명



## 2. 대외정세

### 가. 6자 회담관련

#### ● 골드버그, 中 대북제재 이행 불변(10/21, 연합)

- 중국은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의 방북 이후에도 대북 제재를 이행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필립 골드버그 미국 대북제재 조정관이 20일 밝힘.
- 중국을 방문 중인 골드버그 조정관은 이날 허야페이(何亞非) 중국 외교부 부부장 등 중국 관리들과 회동한 뒤 베이징 웨스턴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답변, 골드버그 조정관은 “중국 측과 좋은 분위기에서 매우 협조적으로 회담을 했다”면서 “특히 회담에서는 제재의 핵심원칙이 한반도의 비핵화이며 제재는 다자회담, 즉 6자회담의 틀 안에서 이뤄져야 하며 1874호와 1718호 등 유엔의 대북 제재결의안이 충실히 이행돼야 한다는 점 등 3가지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언급
- 그는 “북·미간 양자회담을 준비하고 있지만 이 역시 다자회담의 틀 안에서 이뤄지는 것”이라고 강조, 그러면서 그는 이날 방중한 리근 북한 외무성 미국국장 등 북한 관리들과의 회동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접촉도 없었다”고 답변

### 나. 북·미 관계

#### ● 뉴욕서 북미 접촉·리근-성김 회동(10/25, 연합)

- 방미 중인 북한 외무성의 리근 미국국장이 24일(이하 현지시각) 뉴욕에서 6자회담의 미국측 수석대표인 성 김 북핵특사와 만나 양국간 현안을 논의
- 리 국장을 비롯한 북한 대표단은 이날 오전 11시30분께 뉴욕 맨해튼의 유엔주재 미국 대표부에 도착해 성 김 특사와 회동
- 리근 국장은 약 1시간에 걸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성 김을 만나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고 설명, 그는 이어 논의 내용에 대해서는 “두고 보자”며 말을 아꼈고 미국측과의 추가 회동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또 볼 수도...”라며 여지를 남김. 하지만, 배석했던 유엔주재 북한대표부의 김명길 공사는 “여기서 오늘 더 만날 계획은 없다”면서 “샌디에이고에 가서 보자”고 말해 향후 샌디에이고 등에서 북미 간의 추가 접촉 계획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음.
- 성 김 특사는 리 국장이 떠난지 50여분 뒤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채 건물을 떠났음. 미 국무부의 노엘 클레이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리 국장이 민간단체의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했다”며 “리 국장의 방미 기간인 24일 성 김 특사가 북한의 비핵화와 6자회담에 관한 우리의 입장을 전하기 위해 뉴욕에서 리 국장을 만날 기회를



가졌다”고 밝힘.

- 이날 리 국장과 성 김 특사의 회동도 1시간 정도만 진행됐지만 협의를 마치고 나오는 리 국장의 표정은 밝아보여 논의가 원만히 진행됐음을 시사

### ● 조총련 부의장, 한반도 문제, 공은 美에(10/23, 조선신보)

-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허종만 책임부 의장은 22일 “리근(북한 외무성 미국)국장의 미국 방문과 조(북)미 접촉, 보즈워스 특별대표의 조선방문이 예견되고 있다”며 “조선문제에서 공은 미국측에 있다”고 말했다고 조선신보가 23일 보도
- 허 책임부 의장은 이날 일본을 방문한 피터 휴즈 북한 주재 영국대사와 총련중앙회관에서 면담을 갖고 “조선의 핵보유는 미국의 적대시정책에 기인되고 조선반도 비핵화는 김일성 주석님의 유훈”이라는 입장을 밝힘.
- 그는 “일본정부의 적대시정책으로 인하여 조·일간에 국교가 없는 상태에서 총련이 두 나라 사이에서 다리의 역할을 다해왔다”며 평양선언을 이행하지 않고 대북제재조치를 취하고 있는 일본의 자세를 지적하면서 “두 나라의 관계악화의 책임은 전적으로 일본측에 있다”고 주장했다고 신문은 전언
- 휴즈 대사는 “총련의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최근 중국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의 평양 방문시에 조선이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다자회담에 임할 의향을 표명한데 대하여 환영하고 유관국들도 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고 조선신보는 소개

### ● 北 리근 뉴욕 도착…북미 접촉 이뤄질듯(10/23, 연합)

- 북한 외무성 리근 미국국장이 23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뉴욕에 도착해 방미 일정에 들어감. 리 국장은 23일 오후 3시40분께 일본 나리타 공항발 노스웨스트항공편으로 뉴욕 JFK 공항에 도착, 리 국장은 뉴욕에 하루나 이틀 머문뒤 샌디에이고로 이동해 동북아시아 협력대화(NEACD)에 참석하고 다시 뉴욕으로 돌아와 북한 문제 토론회에 참석할 예정이며 이 기간에 미국 측과 양자 접촉이 이뤄질 것으로 보임.

### ● 성김-리근 빠르면 주말 회동 가능성(10/23, 연합)

- 미국은 23일 샌디에이고에서 열릴 동북아시아협력대화(NEACD) 및 뉴욕에서 열릴 토론회 참석차 방미하는 리 근 북한 외무성 미국 국장과 미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성 김 북핵특사와의 접촉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밝힘.
- 이언 켈리 국무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성 김 특사 또는 다른 미국 당국자가 동북아 협력대화가 열리기 전인 이번 주말 리 근 국장을 만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배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해 가능성을 일축하지는 않음. “그것과 관련해 발표할 것은 전혀 없다”고 밝힘.

- 이에 따라 북미 양자간 접촉은 빠르면 동북아 협력대화가 열리는 26~27일 이전에 이뤄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 국무부의 한 당국자는 이날 북미 접촉 문제를 언급하면서 “비공식 회동”이라고 언급

● **美 그레이엄 목사, 방북결과 美 정부측에 설명(10/22, 미국의소리방송)**

- 지난주 방북했던 미국의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가 방북기간 박의춘 외무상, 김계관 외무성 부상 등과 만난 결과를 이미 일부 미국 정부 관계자들에게 전화통화로 설명한 데 이어 한두주 내로 직접 면담을 통해 설명할 것이라고 미국의 소리(VOA)방송이 22일 보도
- 저명한 부흥전도사인 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아들이기도 한 그는 북한 당국자들과 면담에서 평양에 북한주재 외국 외교관들을 위한 교회 설립을 허용해 줄 것과, 북한이 지난 1968년 나포한 미국 해군 정보함 푸에블로호의 반환을 요청하기도 했다고 VOA는 전언, 그레이엄 목사는 방북 기간 박의춘, 김계관 외에도 이달 하순 방미하는 리군 외무성 미국국장, 김영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등과 면담

● **클린턴 美 국무, ‘북핵 대응원칙’ 주목(10/22, 연합뉴스)**

-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21일 ‘핵무기를 가진 북한과는 관계정상화가 불가능하다’는 등 북핵 대응원칙을 표명, 클린턴 장관이 제시한 북핵 대응원칙은 크게 세가지로 압축됨. 6자회담의 틀 내에서 북한과의 양자대화가 준비돼있고, 북한의 협상장 복귀만으로는 충분치 않고 검증가능하고 비가역적인 조치가 있어야 제제가 풀릴 수 있으며, 핵무기를 가진 북한과는 결코 관계정상화가 없다는 것임.

● **김계관, 성공적 북미회담까지 적극 협력**

-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은 “앞으로 성공적인 조미(북미)회담이 진행될 때까지 우리가 적극적 협력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김 부상은 19일 밤(현지시간) 방영된 미국 폭스뉴스 ‘온 더 레코드’ 프로그램과의 간이 인터뷰에서 “조미 두 나라 인민(국민)의 공동 목표인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라면서 이같이 언급
- 김 부상의 언급은 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아들이자 구호단체 ‘사마리탄즈 퍼스’의 회장인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가 지난 13일 북한을 방문할 당시 동행한 폭스뉴스 기자의 ‘미국 국민에게 직접 전할 말은 없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



● **美, 김정일, 이대통령 초청 언급(10/19, 연합)**

- 미 국방부의 고위 관계자는 18일 “우리는 지금 갑작스럽게 북한이 ( 입장을 바뀐) 우호적으로 나오는 단계에 도달했다”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명박 대통령을 초청하고,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가 (이달 초) 북한을 방문했다”고 언급, 이 관계자는 로버트 게이츠 (Gates) 국방장관의 아시아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의에 동행하는 기자들을 위한 브리핑에서 “북한이 다음에 취할 단계가 무엇이나”는 질문에 답변하면서 이같이 언급. 이 관계자는 언제 김 위원장이 이 대통령을 초청했는지, 한국이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음.

다. 북·중 관계

● **북한우표전시회 베이징서 개최(10/21, 조선중앙통신)**

- 북한우표전시회가 ‘북·중친선의 해’를 맞아 16일부터 18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1일 소개, 이번 전시회에는 4천600여종의 우표가 전시됐으며 북한우표연구토론회도 개최되었음.

● **北 남포항 개방하나, 中에 보세가공 승인(10/19, 연합)**

- 북한이 중국에 남포항 보세가공 업체 설립을 허용한 것으로 확인, 남포항을 개방할 것이라는 추측이 나돌긴 했지만 외자 유치 사례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특히 보세가공업을 허용한 것은 개성공단과 나진-선봉 경제특구 개발에 이어 남포항을 수출가공과 자유무역 특구로 개발하려는 북한의 의지를 확인한 것으로 해석돼 주목
- 북한 당국의 ‘기업 창설 승인서’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3월 22일 북한의 ‘령봉연합회사’와 중국의 ‘산둥 영성성달전자유한공사’의 남포항 일대 개발을 승인, 북한 무역성 명의로 발급된 이 승인서는 총 880만 유로(약 152억 원)의 초기 투자비 가운데 북한 측이 55%, 중국 측이 45%의 지분을 출자, 평안남도 남포시 갑문2동에 합영회사를 설립토록 했음.
- 북한은 토지 등 물자를 대고 실질적인 개발 자금 380만 유로(약 66억 원)는 중국 업체가 부담하는 조건, 계약 기간은 2058년까지 50년간으로, 항운과 해운업, 운전기자재의 수리·정비 및 재수출, 중계업은 물론 보세가공업까지 할 수 있도록 허용
- 이 합영회사는 남포항 갑문 남쪽 해안 개발은 물론 이 일대 해수면 매립 개발권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짐. 해안 토지 면적은 100만㎡로, 330만㎡인 개성공단 면적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지만 향후 해수면 매립 개발이 이뤄지면 총 개발 면적이 4km<sup>2</sup>로 늘어나 개성공단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큰 규모를 갖추게 됨.
- 승인 당시 영성성달 측은 2008년 10월까지 등록 자본을 납입하고



을 10월까지 공장을 완공, 본격 조업에 나설 계획이었으나 내부 사정으로 인해 지금까지 투자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

#### 라. 북·러 관계

##### ● 北 원산-러 블라디보스토크 자매 결연(10/19, 조선중앙통신)

- 북한 원산시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시가 ‘자매관계 설정 및 친선과 협조 강화에 관한 협정’을 19일 원산에서 조인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조인식에는 북측에서 조선-러시아친선협회 위원장인 홍선옥 대외문화연락위원회 부위원장, 리일섭 원산시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러시아측에서 이고르 푸시카료프 시장과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주북 러시아 대사관 공사참사가 참석.
- 두 도시의 자매결연을 계기로 블라디보스토크시 사진 전시회와 러시아 도서 기증식도 19일 북한 강원도미술전람관에서 개최
- 블라디보스토크시 대표단은 18일 항공편으로 평양에 도착해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을 면담, 이고르 푸시카료프 블라디보스토크 시장이 20일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과 관계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 마. 북·일 관계

##### ● 통일신보, 日, ‘무라야마 담화’ 계승으로 안돼(10/24, 통일신보)

- 통일신보는 24일 ‘선택을 바로 해야 한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총리가 과거의 식민지 지배와 침략의 역사를 사죄한 ‘무라야마 담화’를 기본적으로 계승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조선인민과 세계인류가 바라는 것은 어정정한 반성의 답습이 아니라 피비린 과거에 대한 철저한 사죄와 배상”이라고 강조
- 통일신보는 “반성의 답습인가, 사죄와 배상인가. 일본은 선택을 바로 해야 한다”며 “우리 민족에게 끼친 과거의 죄악에 대해 일본은 철저히 사죄하고 배상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

#### 바. 기타외교 관계

##### ● 北, 몽골주재대사에 리철광 임명(10/24,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을 통해 몽골주재 대사에 리철광을 임명했다고 발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4일 간략히 보도
- 2004년 8월 임명됐던 박정도 대사의 후임인 리철광 대사는 2001년 11월부터 2005년 2월까지 우즈베키스탄 주재 대사를 지냈었음.
- 북한과 몽골은 1948년 외교관계를 수립한 후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으나 북한은 1999년 8월 경제난 등으로 울란바토르 주재 대사관을 폐쇄했다가 2004년 8월 다시 문을 열었음.



- **주북 시리아 임시 대리대사 연회 개최(10/23, 조선중앙통신)**
  - 주북 시리아 임시 대리대사가 22일 대사관에서 북한 노동당 창건 64주년을 축하하는 연회를 개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3일 보도, 연회에는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과 리룡남 무역상, 김태중 당 중앙위 부부장, 김형준 외무성 부상이 참석
- **베를린아시아여성영화축전 북한영화 상영(10/23, 조선중앙통신)**
  - 독일에서 열린 제3차 베를린아시아여성영화축전에서 16일 특별일정으로 북한 영화 '한 여학생의 일기'가 상영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3일 소개, 축전기간 '꽃 파는 처녀', '도라지꽃', '홍길동', '춘향전' 등의 북한 영화가 상영

### 3. 대남정세

- **경남 민간통일운동단체, 31일 北에 의약품 보내(10/25, 연합뉴스)**
  - 경남의 민간 통일운동단체인 사단법인 '하나됨을 위한 늘푸른 삼천'은 평양 제1인민병원 외과병동 지원사업의 하나로 오는 31일 인천항을 통해 북한에 의약품 등을 보낸다고 25일 밝힘. 이번에 전달하는 물품은 진통제와 항생제, 고혈압약 등 의약품(6천만원 상당)과 휠체어 10개, 이동 혈압측정 기기 10개 등임.
- **남북, 정상회담준비 추가접촉 방침(10/23, 연합뉴스)**
  - 남북은 최근 제3국에서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예비접촉을 가진데 이어 조만간 고위급 수준의 본격적인 접촉을 가질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이번 제3국에서의 남북간 접촉이 실무급 수준이었다면 향후 접촉은 사실상 특사 성격의 고위급 수준 접촉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 남북관계에 정통한 정부 소식통은 이날 "최근 실무급 접촉에서 장소 등에서 이견이 있었지만 앞으로도 계속 남북접촉을 진행할 것"이라며 "현 상황에서 연내 정상회담 개최는 어렵지만 내년에는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언급, 한 핵심당국자는 "남북간에 정상회담을 놓고 현격한 시각차가 있는 만큼 만약 성사가 된다면 내년 6월 지방선거 이후에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
  - 지난번 실무접촉에서 남북간 이견이 노출됐던 정상회담 장소 문제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건강과 신변안전 문제를 고려, 판문점 등 중립적인 지역에서 개최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음. 이와 함께 2010년 11월 한국에서 개최되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때 김 위원장을 초청하는 형식으로 남북정상회담을 갖는 방안도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 ● 북한산 모래 반입 재개 논란(10/23, 조선일보)

- 통일부 당국자는 23일 “우리측 모래 반입 업체들의 계속된 요구와 전반적인 남북관계 상황 등을 감안해 북한산 모래 반입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 북한은 노무현 정부 마지막 해인 2007년 1495만6000m<sup>3</sup>의 모래를 팔아 3627만달러를 벌었고, 2008년에도 945만9000m<sup>3</sup>를 판매해 2673만달러를 벌어들임. 그러나 2009년도 들어서는 1~4월에 75만3000m<sup>3</sup>의 모래로 147만달러를 얻었을 뿐임. 북한의 모래 사업은 군부 소속 회사들이 주로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북한 모래는 해주와 고성 두 곳에서 들어오고 있음.

### ● 올해 대북 보건의료 지원 급감(10/22, 연합뉴스)

- 남한 민간단체들이 지원한 북한의 정성제약, 대동강제약 공장의 정상가동을 위해선 남한 제약회사들의 기술지원이 시급하다고 김진숙 보건복지가족부 국제협력담당관이 22일 밝힘.
- 그에 따르면 남북협력기금이 민간단체나 세계보건기구(WHO) 같은 국제기구를 통해 집행한 보건의료분야 대북 지원액은 지난 2007년 367억원에서 지난해 262억원, 올해는 10월 현재 57억원으로 급감, 이때문에 어린이와 임산부 사망률 감소, 영양 장애율 개선 등을 목표로 한 취약계층 건강지원 사업에서도 식량지원은 목표 대상의 39%에 그쳤고, 어린이 설사치료제는 1년 총 필요량의 50%만 공급됐으며, 임산부 영양제 지원은 대상의 50%에게 6개월간으로 제한됐고 영양실조가 심각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영양식 지원도 전체 필요의 25%만 지원되는 실정이라고 밝힘.

### ● 남성욱, 김정일, 장성택·김정은 압박 시작(10/22, 연합뉴스)

- 남성욱 국가안보전략연구소장은 21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로 알려진 3남 김정은과 관련, “지난 6~7월 군 인사문제를 둘러싸고 아버지(김정일)와 충돌하는 일이 생기면서 김정일이 장성택, 김정은 리더십을 압박하기 시작했다”고 언급, 남 소장은 이날 밀레니엄서울힐튼 호텔에서 열린 도산아카데미 조찬 세미나에 참석, “지난 8월 이후 후계논의가 물밑으로 가라앉은 상태”라고 밝힘.
- 장성택 북한 국방위원 겸 노동당 행정부장은 김 위원장의 여동생 김경희 당 중앙위원회 경공업부장의 남편으로, 김정은 후계체제 구축을 지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남 소장은 또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8월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조문차 방남한 김기남 노동당 비서와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을 만났을 때 “지금 이 어느 때인데, 군사적 도발로 문제를 풀려는 생각을 하지 말라”며 “금강산 관광을 비롯한 여러 사업은 북한이 하기에 달렸다”고 말했다고 전언, “대통령께서 김 비서에게 ‘잘못된 행동을 얼마 안 있다 원상회복 시켜놓고 마치 착한 일을 해가지고 보상을



받으려는 일은 이명박 정부에서 절대 용납이 안 된다'고 말했다"고 소개

- 남 소장은 최근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 움직임에 언급, “쌀은 안 되고 옥수수를 3만t 범위 내에서 주겠다는 입장”이라며 “우리가 호의를 베풀기 때문에 북한도 인도적 차원에서 이산상봉을 정례화해야 한다”고 언급
- 남 소장은 김 위원장의 활발한 대외활동에 대해 “대역을 쓰는 경우도 있고 유사한 모습을 갖고 있는 배우가 세 명 정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상반기 대외활동) 74회는 과장된 숫자로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
- 이어 “미국은 보즈워스 대북 정책 특별대표가 특사인 만큼 김 위원장에게 직보하는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을 꼭 만나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북한은 보즈워스는 김계관 외무성 부상을 만나야 하고 강석주를 만나려면 최소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와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

#### ● 北, 임진강희담서 南책임론 제기(10/21, 연합)

- 북한이 지난 14일 남북 임진강 수해방지 실무회담에서 ‘황강댐 무단 방류’로 인한 우리 측 인명피해에 유감을 표명하는 동시에 ‘남측에도 책임이 있다’는 논리를 내세웠던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 대북 소식통은 이날 “북측은 당일 총 1시간35분간 진행된 회의에서 (제1,2차 남북정상회담 합의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이 이행됐으면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두 선언을 이행하지 않은 우리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고 전언, 북측은 또 방류로 인해 자신들에게도 인명피해가 있었다면서 남측에 피해를 주기 위해 고의로 수문을 연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의 언급도 했던 것으로 알려짐.
- 실제로 임진강 사고 당일인 9월 6일 북한에서 4~5세로 추정되는 남자 어린이가 숨진 채 떠내려 왔다가 우리 군 초소병에 발견되었음.
- 아울러 북측은 수위가 올라갔을 때 남측의 경보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도 사고의 한 원인이었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짐.

#### ● 정부, 北에 軍통신현대화 장비제공(10/21, 연합)

- 정부는 남북 육로통행 관리에 사용되는 군 통신선의 현대화를 위한 자재·장비를 북한에 제공기로 했다고 21일 밝힘. 통일부는 “19일 북측에 우리 국민들의 통행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통신선로 개선공사를 할 용의가 있다는 의사를 전달했고 북측도 20일 동의의사를 통보해 왔다”며 “28일부터 통신선로 개선에 필요한 광케이블, 통신관로 등 20억원 상당의 통신 기자재를 북측에 제공하고 각기 자기측 구간에서 필요한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힘.
- 통일부는 이어 “선로개선공사는 남북이 자기측 구간에서 공사를 하



고 군사분계선 상에서 선로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며 “공사에는 1~2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본격적인 동절기가 시작되기 전에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

 북한연구센터 제공



## II. 동북아정세

### 1. 대북한 관련

####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 캠벨 “북·미대화, 6자회담 신속재개 이끌어야”(10/19)

- 미국은 19일 북한과의 양자대화가 6자회담의 신속한 재개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이 북·미 대화의 사실상의 조건임을 거듭 시사함.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이날 중국 문제를 주제로 워싱턴에서 열린 미국외교협회(CFR) 포럼에 참석, “적절한 환경에서, 신속히 6자회담의 재개로 이끌 (북한과의) 초기 대화에 우리가 준비돼 있다는 점을 매우 분명히 해 왔다”고 밝힘.
- 그는 미국과의 양자대화를 원하는 북한의 요구에 응하는데 있어서 “인내와 신중함”의 필요성을 거듭 지적하면서 아직 북한과의 양자 대화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말함. 그는 또 자신의 최근 중국 방문과 관련, 북한이 6자회담 복귀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음은 물론 “2005년, 2007년 서명한 (6자회담) 약속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우리가 정말 주장해야 한다는 것을 중국측에 얘기했다”고 전함.
- 캠벨 차관보는 이어 원자바오 중국 총리의 방북 결과와 관련, 중국 측으로부터 충분히 내용을 전해들었다면서 “중국은 북한이 일본, 한국과도 비슷한 양자 대화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도 함께 전달했다”고 말함. 그는 또 원 총리의 방북으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건강 상태에 대한 재확인을 했다고 밝힘. 그는 “김정일이 꽤 건강하다고 원 총리가 믿는다고 들었다”면서 “그(김정일)는 (원 총리 방북 당시) 대화를 이끌었고,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소개함.

##### ● 柳외교 “대북정책 주안점 비핵화에 뒤편”(10/19)

-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19일 “핵무장한 북한과 협력하며 공존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대북 정책의 주안점은 비핵화에 주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함. 유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 외신기자 클럽에서 열린 한국언론재단 주최 외신기자 세미나에 참석, 연설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진정성 여부는 북한이 비핵화 논의에 얼마나 성실히 응하느냐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함.
- 그는 이어 “북한이 핵 포기 결심을 보여주면 우리 정부는 적극적으로 이에 호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핵심 조치들과 북한이 얻기를 희망하는 조치들을 한꺼번에 테이블에 올려놓고 포괄적으로 협상하는 그랜드 바겐 구상에 관해 관련국들과 협의해 가고 있다”고 말함.



- 유 장관은 “북한이 진심으로 남북관계의 진전을 원한다면 6자회담에 조속히 복귀해 비핵화에 대한 전략적 결단을 내렸음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함. 그는 특히 7월 이후의 북한측 ‘평화공세’에 언급, “북측이 보이고 있는 유화적 조치들이 핵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태도의 변화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할 근거는 아직 없는 상황”이라고 말함. 유 장관은 국제사회의 ‘제재와 대화 병행’을 근간으로 한 ‘투 트랙 어프로치’와 관련, “제재는 제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북한을 대화로 복귀시키기 위해 행해지는 것”이라고 설명한 뒤 “제재와 대화를 병용함으로써 북한이 올바른 선택과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함.
- 북·미 양자대화 문제에 대해 유 장관은 “6자회담이 북핵문제 해결에 가장 유용한 협상의 틀이라는 점에 대해 5자는 일치된 입장을 가지고 있다”면서 “미국 정부도 북핵 문제의 실질적 협상은 6자회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확고히 견지하고 있다”고 말함. 유 장관은 “핵을 포함한 대량살상무기의 비확산 문제는 남·북한 관계에서 뿐아니라 국제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글로벌 이슈”라고 규정한 뒤 “내년 4월에는 오바마 대통령의 제안으로 핵안보 정상회의가 열리고 다음 달인 5월에는 핵확산방지조약(NPT) 평가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라며 “북한의 비핵화와 비확산은 서로 연계되어 있는 중요한 문제”라고 말함. 그는 “북한의 비핵화를 등한시하는 것은 국제 비확산 체제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으므로 한반도뿐 아니라 전세계의 안보를 위해서도 북한 핵은 완전히 폐기되어야 한다”고 말함.
- 유 장관은 북한이 밝힌 우리농축 시험 성공과 관련해 별도의 대북 제재가 추진될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이는 아주 우려스러운 상황의 변화”라고 지적하고 “이 문제에 대해 유엔에서 별도의 논의가 있게 될 것으로 본다”고 말함. 한편, 유 장관은 최근 한·미 간에 논란이 된 ‘김정일 위원장의 이명박 대통령 평양방문 초청’ 문제에 언급, “특정한 이슈를 확대할 필요가 없다”면서 “북한측과 남북관계 진전이나 핵문제에 대한 논의는 언제 어디서나, 어떤 기회에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함.

#### 나. 미·북 관계

##### ● 뉴욕서 북미 접촉..리근-성김 만나(10/25)

- 방미 중인 북한 외무성의 리근 미국국장이 24일(이하 현지시각) 뉴욕에서 6자회담의 미국측 수석대표인 성 김 북핵특사와 만나 양국간 현안을 논의했음. 리 국장을 비롯한 북한 대표단은 이날 오전 11시 30분께 뉴욕 맨해튼의 유엔주재 미국 대표부에 도착해 성 김 특사와 회동했음. 이들은 이날 회동에서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 문제와 북미 양자대화, 북한의 6자회담 복귀 등 북미간



현안을 협의한 것으로 보임.

- 리근 국장은 약 1시간에 걸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성 김을 만나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논의 내용에 대해서는 “두고 보자”며 말을 아꼈음. 미국측과의 추가 회동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또 볼 수도...”라며 여지를 남겼음.
- 하지만, 배석했던 유엔주재 북한대표부의 김명길 공사는 “여기서 오늘 더 만날 계획은 없다”면서 “샌디에이고에 가서 보자”고 말해 향후 샌디에이고 등에서 북미 간의 추가 접촉 계획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음.
- 미 국무부의 노엘 클레이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리 국장이 민간단체의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했다”며 “리 국장의 방미 기간인 24일 성 김 특사가 북한의 비핵화와 6자회담에 관한 우리의 입장을 전하기 위해 뉴욕에서 리 국장을 만날 기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 이날 리 국장과 성 김 특사의 회동도 1시간 정도만 진행됐지만 협의를 마치고 나오는 리 국장의 표정은 밝아보여 논의가 원만히 진행됐음을 시사했음. 리 국장은 기다리고 있던 기자들에게 “안녕하십니까”라고 밝게 인사를 하고 질문에 간단하게 답하기도 했음.
- 리 국장을 비롯한 북한 대표단 5명은 전날 오후 뉴욕 JFK공항에 도착했으며, 샌디에이고로 이동해 26~27일 열리는 동북아시아협력대화(NEACD)에 참석한 뒤 뉴욕에 돌아와 30일 전미외교정책협의회(NCAFP)와 코리아소사이어티가 주최하는 북한문제 토론회에 참석할 예정임.

#### ● 北 리근 뉴욕 도착..주말 북미 회동(10/24)

- 북한 외무성 리근 미국국장이 23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뉴욕에 도착해 방미 일정에 들어갔음. 리 국장은 주말인 24일 뉴욕에서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인 성 김 북핵특사와 만나 비공식 북미 회동을 갖고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과 북미 양자대화, 북한의 6자회담 복귀 등 북미간 현안을 협의할 것으로 예상됨.
- 리 국장을 비롯한 북한 대표단 5명은 이날 오후 3시40분께 일본 도쿄 나리타공항발 노스웨스트항공편으로 뉴욕 JFK 공항에 도착했음. 당초 베이징에 머물렀던 리 국장은 베이징-뉴욕 간 직항편을 타지 않고 일본을 경유한 것으로 보임. 밝은 표정으로 입국장을 나온 리 국장은 공항에서 방미 일정에 관해 묻는 기자들에게 “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교환하러 왔다”며 “이제 (미국에) 첫 발자국을 디뎠는데 끝나고 돌아갈때 얘기하자”고 말했다.
- 리 국장은 미국의 성 김 북핵특사와 만날지를 물어보자 “일단 왔으니까 그 사람들 계획에 따라 움직이게 될 것”이라고 말해 미국 측과의 일정 협의에 따라 만날 것임을 시사하고 남북 정상회담 추진 여부에 대해 아는지를 물어보자 “모른다”고 밝혔다.
- 리 국장은 마중나온 차를 타고 공항에서 나와 숙소인 맨해튼의 한



호텔에 신선호 유엔주재 북한대사와 함께 도착했으나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자 차에서 내리지 않은채 잠시 머물다 차를 돌려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가 1시간여 뒤에 돌아와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숙소로 들어갔음.

- 리 국장은 뉴욕에 이틀 정도 머문뒤 25일 샌디에이고로 이동해 26~27일 열리는 동북아시아협력대화(NEACD)에 참석하고 다시 뉴욕으로 돌아와 북한 문제 토론회에 참석할 예정이며 이에 앞서 24일 미국 측과 양자 접촉이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 리 국장 방미 직후에 예상보다 빨리 북미 회동이 이뤄지는 것은 미국측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으며 미국측은 회동을 통해 북측의 입장을 들은 뒤 그 결과에 따라 추가 접촉에 나설 것으로 예상됨. 미 국무부도 이날 리 국장과 성 김 북핵특사의 접촉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밝혔음.
- 리 국장이 참석하는 샌디에이고 동북아협력대회는 미 캘리포니아 대학 산하 '세계분쟁 및 협력연구소' 주최로 6자회담 참가국 외교·국방부 관료와 학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6~27일 양일간 샌디에이고 인근 라호야의 한 호텔에서 개최되며, 뉴욕 토론회는 전미외교정책협의회(NCAFP)와 코리아소사이어티 주최로 한반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30일 열림.

#### ● 월러드 사령관 “北 불확실성에 계속 대처”(10/21)

- 로버트 월러드 신임 미국 태평양군사령관은 21일 “태평양사령부는 앞으로도 미국의 전 정부 차원에서는 물론 국제사회와 더불어 북한 정권의 불확실성에 계속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힘. 월러드 사령관은 이날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 연합뉴스 등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의 방한에 동행취재 중인 기자들과 만나 “북한 문제는 단순한 군사적인 도전과제가 아니라 미국 정부 전체가 감당해야 할 문제”라며 이같이 밝힘.
- 월러드 사령관은 “북한의 도전은 과거에는 한국에 큰 위협이 됐지만, 이제는 역내 문제를 넘어 국제적인 문제가 됐다”면서 “북한 문제는 단순한 군사적 접근이 아니라 국무부를 위시해 다른 정부 부처가 협력해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함. 또 월러드 사령관은 “핵을 지닌 북한, 후계문제를 앞두고 도발을 선택하는 북한은 분명히 우려스러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북한을 매우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 그는 북한의 급변사태와 관련해 그간 한·미 정부간의 협의가 있었는지, 또 22일 서울에서 열리는 연례안보회의(SCM)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그런 문제는 게이츠 장관이 직접 언급하는 것이 나올 것 같다”며 답변을 피함.



● 김계관 “성공적 북·미회담까지 적극 협력”(10/21)

-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은 “앞으로 성공적인 조미(북·미)회담이 진행될 때까지 우리가 적극적 협력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김 부상은 19일 밤(현지시간) 방영된 미국 폭스뉴스 ‘온 더 레코드’ 프로그램과의 간이 인터뷰에서 “조미 두 나라 인민(국민)의 공동 목표인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라면서 이같이 말함.
- 김 부상의 언급은 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아들이자 구호단체 ‘사마리탄즈 퍼스’의 회장인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가 지난 13일 북한을 방문할 당시 동행한 폭스뉴스 기자의 ‘미국 국민에게 직접 전할 말은 없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나온 것임. 북한 리 근 외무성 미국국장이 26~27일 미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에서 열리는 동북아 협력대화(NEACD)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길에 북·미간 접촉이 예상되는 가운데 나온 이 언급은 북·미 대화를 원하는 북한의 적극적인 입장을 거듭 확인하는 것임.
- 김 부상은 그레이엄 목사 일행을 면담한 직후 가진 이 인터뷰에서 “크게 할 말은 없지만, 미국에서 모든 일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서 “평화가 깃들기를 바란다”고 말함. 그는 또 북한과 미국간의 우의가 조성되기를 희망한다는 뜻도 밝힘.
- 그레이엄 목사는 이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은 민간인 자격으로 왔다고 강조한 뒤 핵을 갖고 핵실험까지 하는 북한을 그냥 무시할 수는 없다면서 북·미간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함.

● 美상원아태소위원장 “북-미안마 핵협력 증거없어”(10/20)

-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의 짐 웹 동아시아·태평양소위원장은 지난 8월 미얀마를 방문했을 때 북한과 미얀마간 핵협력 증거를 찾지 못했으며 따라서 이 의혹의 공론화 등 상원 차원의 대응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0일 전함. 웹 위원장은 지난 18일 이 방송과 인터뷰에서 미얀마 방문시 “군정 최고 지도자인 탄 슈웨 장군과 심도있는 대화를 나눴으며 미얀마 정부 관계자로부터 핵시설 건설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정보를 받았다”고 말함.

● 美과학자들 12월 초 방북(10/20)

- ‘미북 과학교류 컨소시엄’의 미국측 대표단이 북한 과학자들과 북·미간 과학연구 협력과 학술교류 증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12월초 방북한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20일 전함. 일행 4-5명과 함께 방북하는 미국 시라큐스대학의 스투어트 토슨 교수는 VOA와 전화통화에서 이같이 밝히고 “컨소시엄이 구성된 이래 미국 과학자들이 북한을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함.
- 이 컨소시엄은 시라큐스대와 뉴욕의 민간단체인 코리아 소사이어티, 워싱턴에 있는 미국민간연구개발재단이 주축이 돼 지난 2007년 5월



구성됨. 이 컨소시엄은 지난해 2월 보스턴에서 열린 미국과학진흥협회 연차총회에 김명길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공사를 초청해 양국 과학자들간 교류 활성화 문제를 논의했고, 지난 여름엔 방북을 추진했지만 북한의 로켓 발사와 핵실험 등으로 북·미관계가 악화돼 실현되지 못함.

#### 다. 중·북 관계

##### ● 북한전문 中여행사, 北시각장애아 지원(10/24)

- 유럽인과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북한관광 사업을 하는 중국의 고려여행사가 호주의 신탁기금인 마라나타 트러스트와 공동으로 기금을 모아 북한의 시각장애 어린이를 위한 점자사전과 놀이터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24일 전했다.
- 마라나타 트러스트는 지난 2004년부터 북한 재무성과 조선-마라나타 은행을 설립, 북한 기업과 개인에게 소액 자금을 대출하는 사업을 하고 있음.
- 고려여행사는 지금까지 모은 자금 6천700달러로 북한의 시각장애 어린이 300명에게 점자사전을 제공하고 원산지역에 있는 7-11세 사이 고아 550명을 위한 놀이터 시설을 지어줄 계획임.

##### ● 탈북 국군포로 中공안에 체포돼..정부 석방교섭중(10/22)

- 지난 8월 80대 국군포로 1명이 탈북했다가 중국 동북지방에서 공안에 체포돼 정부가 중국 당국과 석방 교섭을 벌이고 있으나 2개월째 병원에 억류중인 것으로 알려짐.
- 최성룡 남북자가족모임 대표는 22일 “두달전 국군포로 1명이 중국 공안에 체포돼 현재 중국 병원에 있다”며 “중국에서 우리 외교부와 비공식 협의해 추방조치를 하면 우리가 바로 한국으로 데려오면 되는데 두 달이 다 되도록 붙잡아 두고 있다”고 밝힘.
- 이에 대해 정부 고위당국자는 “정부가 여러 경로를 통해 석방 교섭을 벌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계속 정씨의 복송을 막고 고국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함.

##### ● “김양건 北 통전부장 방중”<中 외교소식통>(10/20)

- 김양건 북한 통일전선부장이 지난 15일 중국을 방문했다가 20일 귀국했다고 베이징의 외교소식통들이 밝힘. 복수의 베이징 외교소식통들은 “김 통전부장이 지난주 베이징에 도착해 엿새 동안 베이징에 머물다 이날 오후 고려항공편으로 귀국했다”고 말함.
- 소식통들은 김 통전부장의 중국 내 일정은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지만 김 부장이 방중 기간 남북 및 북일 관계 개선에 관한 논의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하고 있음.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김 통전부장이 이번 방중 이외에도 최근 수차례 베이징을 비밀리에 방문했다는 설이 나돌고 있음.

#### ● 골드버그 “中 대북제재 이행 불변”(10/20)

- 중국은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의 방북 이후에도 대북 제재를 이행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필립 골드버그 미국 대북제재 조정관이 20일 밝힘. 중국을 방문 중인 골드버그 조정관은 이날 허야페이(何亞非) 중국 외교부 부부장 등 중국 관리들과 회동한 뒤 베이징 웨스턴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함.
- 이런 발언은 최근 원자바오 총리의 방북을 계기로 중국이 북한에 상당액수의 무상지원을 하면서 대북 제재가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임. 골드버그 조정관은 “중국 측과 좋은 분위기에서 매우 협조적으로 회담을 했다”면서 “특히 회담에서는 제재의 핵심원칙이 한반도의 비핵화이며 제재는 다자회담, 즉 6자회담의 틀 안에서 이뤄져야 하며 1874호와 1718호 등 유엔의 대북 제재결의안이 충실히 이행돼야 한다는 점 등 3가지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말함.
- 그는 “북·미간 양자회담을 준비하고 있지만 이 역시 다자회담의 틀 안에서 이뤄지는 것”이라고 강조함. 그러면서 그는 이날 방중한 리근 북한 외무성 미국국장 등 북한 관리들과의 회동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접촉도 없었다”고 말함. 마자오쉬(馬朝旭)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골드버그 조정관이 19~20일 방중기간 중국 관리들과 만나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의 이행 문제를 논의했다고 말함.

#### 라. 일·북 관계

##### ● 日, 北화물검사법 임시국회서 처리(10/22)

- 일본의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정부가 이달 26일 소집되는 임시국회에서 북한화물검사법을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아사히신문이 22일 보도함. 일본 정부는 연립 여당을 구성하고 있는 사민당과 국민신당에도 이런 방침을 전달해 동의를 얻었음.
-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외상은 지난 20일 “북한이 지금 유화적으로 나온다고 해서 화물검사에 관한 법안을 처리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결의한 내용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법안이다”고 밝힌 바 있음. 일본 정부가 북한화물검사법을 서둘러 처리하기로 한 것은 야당인 자민당이 이번 임시국회에 북한화물검사법안을 제출할 예정이어서 선수를 빼앗기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여짐.
- 일본 정부는 애초 이번 임시국회에서 북한화물검사법안을 제출할 방침이었으나 공동 여당인 사민당이 반대하는 데다 북한이 최근 북·



미 대화와 6자회담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힌만큼 추이를 지켜보면서 법안 제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음. 자민당이 제출했다가 8.30 총선으로 중의원이 해산되면서 폐기된 북한화물검사법안은 북한을 출입하는 선박, 항공기가 수출금지 물품을 싣고 있는 것으로 의심될 경우 해상보안청과 세관에서 검사할 수 있도록 함. 또 해상보안청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울 때는 자위대가 현장에 출동할 수 있도록 함.

#### 마. 기타

##### ● 李대통령 “北 의도, 아직 불투명”(10/25)

- 이명박 대통령은 25일 “아직 북한의 의도가 불투명하며 핵을 포기하겠다는 결단을 내렸다는 징후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음. 이 대통령은 동남아 3개국 순방 마지막날인 25일 EAS(동아시아정상회의) 업무 오찬에 참석, 이같이 말했음.
- EAS는 아세안(ASEAN)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지역 협의체로 이번에 4번째 정상회의를 가졌으며 이 대통령은 처음 참석했음.
-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제사회는 대화의 길을 계속 열어놓되 유엔안보리 결의 1874호의 엄격한 이행 등 단합된 입장을 유지하면서 북한으로 하여금 진정한 대화로 나오도록 해야 한다”며 “북한이 핵포기의 결단을 내리고 조속히 6자회담으로 복귀하도록 국제사회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북한이 최근 북핵 양자 및 다자회담에 참여하겠다는 밝히고 남북관계의 진전을 원한다는 메시지를 내고 있지만 북한의 의도가 확인되지 않은 만큼 경계를 늦추지 않고 대화와 제재를 병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됨.
- 이 대통령은 “북핵 문제가 대두된 이후 국제사회의 해결노력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없이 대화와 긴장상태를 오가며 전진과 후퇴, 지연을 반복해왔다”며 “그 과정에서 상황이 더욱 악화됐으며 더 이상 이러한 전철을 되풀이해서는 안된다”고 말했음.
- 이 대통령은 이어 “이런 판단에 따라 북한 핵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일괄타결 방안을 제시했다”며 “이는 북한의 완전하고 불가역적인 핵폐기와 북한이 필요로 하는 안전보장과 경제원 등에 대해 일괄 합의하는 방안”이라고 밝혔음.
- 이 대통령은 또 이 자리에서 최근 빈발하는 동남아시아 지역의 자연재해에 우려를 표명하고 역내 재난관리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동아시아 지역의 재난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우리 정부의 인도적 지원을 계속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음.
- 이 대통령은 또 기후변화 대처를 위해서는 개발도상국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을 국제적으로 인정하고 격려해주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하고 동아시아 기후 파트너십 등 역내 기후변화 대응협력 강화 의지를 재확인했음.



- ESA정상들은 이날 회의에서 의장성명과 재난관리 성명, 날란다대학 재건에 대한 공동언론성명을 채택했음. 날란다대학은 5세기경 세워진 인도 최고의 불교대학으로, 인도는 지난 2007년 EAS 정상회의때 날란다대학 재건 사업을 제안했었음. 이 대통령은 또 케빈 러드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G20 체제 강화, 기후변화 대처, 북한 핵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음. 이 대통령은 북핵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일괄타결 방안, 즉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을 설명했으며 러드 총리는 이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음. 양국 정상은 내년 11월 한국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가기로 했음.
- 한편 한·중·일 통상장관들은 이날 후아헌에서 회담을 갖고 내년 한국에서 개최되는 한·중·일 정상회의 이전에 한·중·일 FTA(자유무역협정) 산관학 연구를 출범시키기로 했음.

#### ● “북핵 우선시…인권유린은 못본 체”(10/24)

- 국제사회가 핵문제에 치중한 나머지 북한의 잔인하고 조직적인 인권 유린을 못본 체하고 있다고 영국의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지구상의 지옥(Hell on Earth)’이라는 제목으로 24일 북한 인권실태를 보도하며 비판했음. 이 잡지는 한국의 대북지원단체 ‘좋은 벗들’의 소식지를 인용해 원산 부근 주민의 70% 이상은 풀을 섞은 옥수수 죽으로 연명하고 있으며, 강원도 산간 주민들은 내년 봄 ‘고난의 행군’ 이래 최대 식량부족 사태를 걱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 특히 사회주의적 생산을 강화하고 2012년까지 북한을 강성대국으로 만든다는 명분으로 치러진 ‘150일 전투’로 인해 농민들은 작은 토지조차 빼앗겼음. 굶주림에 시달리는 주민들은 암시장과 물물거래로 버티고 있고 민간 시장이 주민이 소비하는 칼로리의 절반, 가계수입의 5분의 4를 제공하고 있음.
- 잡지는 또 북한의 노동수용소에 대한 보고서를 인용해 “암시장 활동, 줌도둑, 심지어 먹을 것을 구하러 떠도는 사람 등 잡범을 수용하는 노동수용소가 급증했다”고 보도했음.
- 이코노미스트는 “서구는 이러한 인권유린을 좀 더 일찍 마음깊이 대하지 않은 것을 부끄러워해야 한다”면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대북인권특사 임명에 8개월이나 걸리는 등 올바른 메시지를 보내지 못했다”고 지적했음.

#### ● 조총련 부의장 “한반도 문제, 공은 美에”(10/23)

-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허종만 책임부의장은 22일 “리군(북한 외무성 미국)국장의 미국 방문과 조(북)미 접촉, 보즈워스 특별대표의 조선방문이 예견되고 있다”며 “조선문제에서 공은 미국측에 있다”고 말했다고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가 23일 보도했음.
- 허 책임부의장은 이날 일본을 방문한 피터 휴즈 북한 주재 영국대사



와 총련중앙회관에서 면담을 갖고 “조선의 핵보유는 미국의 적대시 정책에 기인되고 조선반도 비핵화는 김일성 주석님의 유훈”이라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음.

- 그는 “일본정부의 적대시정책으로 인하여 조.일간에 국교가 없는 상태에서 총련이 두 나라 사이에서 다리의 역할을 다해왔다”며 평양선언을 이행하지 않고 대북제재조치를 취하고 있는 일본의 자세를 지적하면서 “두 나라의 관계악화의 책임은 전적으로 일본측에 있다”고 주-휴즈 대사는 “총련의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최근 중국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의 평양 방문시에 조선이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다자회담에 임할 의향을 표명함에 대하여 환영하고 유관국들도 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고 조선신보는 덧붙였다.

#### ● “北관광당국, 재미교포 북한관광 환영”(10/23)

- 북한의 집단체조 ‘아리랑’ 공연기간에 방북한 미국인 관광단에 처음으로 미국 시민권을 가진 한인 여성 2명이 포함됐으며 북한 관광당국 관계자는 더 많은 재미교포들이 북한관광에 참여하길 희망했다고 미국의 북한관광 전문 여행사 대표가 밝혔음.
- 미국 일리노이주에 있는 ‘아시아태평양여행사’의 월터 키츠 대표는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과 인터뷰에서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미국인 관광단을 이끌고 북한을 방문했었다며 “이번에 미국 시민권자인 재미교포 여성 2명을 처음으로 관광단에 포함시켰는데 북한 관광당국 관계자가 한인 동포의 방문을 언급하면서 다음부터는 더 많은 한인동포들의 방북을 희망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평양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늘었다며 “이전과 달리 관광단을 안내한 3명의 북한 안내원 모두가 휴대전화를 갖고 있을 정도”였다고 설명하고 “관광안내원들은 운전중에도 수시로 휴대전화를 조작했는데 문자로 누군가와 대화하는 것 같았다”고 덧붙였다.
- 지난 관광기간 평양은 대규모 공연장들이 모두 보수공사중인 것을 비롯해 평양의 거리는 재단장 사업이 한창이었으나 “지방도시를 지날 때는 그런 공사하는 모습을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고 그는 덧붙였다.

#### ● <유엔서 ‘北인권’ 문제 논란>(10/23)

- 북한의 인권 문제가 유엔 공개 회의석상에서 공식 제기됨. 비릿 문타폰(Vitit Muntarbhorn)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은 22일(현지시간)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 “북한 주민들은 식량부족과 공개처형, 고문과 광범위한 억압에 처해 있다”면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함. 제3위원회는 국제사회의 인권과 사회 분야를 담당하는 유엔 총회내 소위원회임.
- 문타폰 보고관은 특히 금년에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북핵



6자회담이 표류하고 국제사회의 원조가 크게 줄어들면서 북한의 식량사정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또 제3국에 가 있는 탈북자들의 인권상황 역시 매우 열악하다고 지적함. 그러나 북한 당국의 주민통제가 강화되면서 지난 1년간 국경을 넘어 주변국에 도착한 탈북자들의 수는 줄었다고 밝힘.

- 그는 “북한 정권은 타지로 망명하려는 자에 대한 처벌이나 공개처형을 중지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국제사회가 북한이 선군정치 대신 인민우선정치를 택해 시민들에게 기본적 자유를 보장할 수 있도록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당부함.
- 지난 2004년부터 북한 인권 실태를 조사해온 문타폰 보고관은 매년 북한 인권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해 인권이사회와 총회 제3위원회에 보고해 왔음. 이에 대해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박덕훈 차석대사는 회의 발언을 통해 “적대적인 세력이 작성했고, 거짓과 왜곡으로 가득 찬 정치적 음모 문건인 문타폰 보고관의 보고서를 전적으로 거부한다”고 말함.
- 그는 “이 보고서의 검토는 무의미하며, 오히려 북한의 인권 보호 체계와 현실에 대한 자신감을 강화할 뿐”이라면서 “북한의 인권제도는 무상의료와 교육을 제공하는 등 우월하다”고 주장함.
- 미국측 대표는 “인권은 미국의 최우선 관심사”라면서 “북한이 선군정치를 바꿔서 국제사회가 부응하는 방향으로 인권개선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함. 또 “북한 인접국가들이 탈북자에 대한 강제송환 불응 원칙을 지켜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함. 일본측 대표는 일본인 납치자 문제에 대한 조속한 해결이 북한과 일본 사이의 관계진전에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함.

#### ● 남북, 정상회담준비 고위급 추가접촉 방침(10/23)

- 남북은 최근 제3국에서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예비접촉을 가진데 이어 조만간 고위급 수준의 본격적인 접촉을 가질 것으로 23일 알려짐. 이번 제3국에서의 남북간 접촉이 실무급 수준이었다면 향후 접촉은 사실상 특사 성격의 고위급 수준 접촉이 될 것으로 알려짐.
- 남북관계에 정통한 정부 소식통은 이날 “최근 실무급 접촉에서 장소 등에서 이견이 있었지만 앞으로도 계속 남북접촉을 진행할 것”이라며 “현 상황에서 연내 정상회담 개최는 어렵지만 내년에는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함. 한 핵심당국자는 “남북간에 정상회담을 놓고 현격한 시각차가 있는 만큼 만약 성사가 된다면 내년 6월 지방선거 이후에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함.
- 특히 대통령의 의중을 정확히 반영해야 하고, 보안 유지가 필수적인 사안의 성격상, 외교통상부나 통일부, 국가정보원 등 관련 정부부처의 고위 관계자보다는 현 정권의 직을 갖고 있지 않은 비정부 인사가 남북접촉 대표로 나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짐. 이와 관련해 우리측 고위급 접촉 대표로는 이명박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여권



인사 I, K, L, R씨 등이 거명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 또 현재의 북한 핵 문제와 남북관계를 고려할 때 남북 당국간 협회가 급진전돼 연내 정상회담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내년에는 성사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음. 지난번 실무접촉에서 남북간 이견이 노출됐던 정상회담 장소 문제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건강과 신변안전 문제를 고려, 판문점 등 중립적인 지역에서 개최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음. 이와함께 내년 11월 한국에서 개최되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때 김 위원장을 초청하는 형식으로 남북정상회담을 갖는 방안도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 한편 지난 20~25일 중국 베이징(北京)을 방문한 김양건 북한 통일전선부장과 원동연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실장이 방중을 전후해 제3국에서 우리 정부의 통일관련 고위 관계자와 만났다고 정보관련 핵심인사가 밝힘. 남북이 접촉한 제3국은 싱가포르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짐.
- 북한의 제안에 따라 성사된 이번 접촉에서 북한은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제안했고, 우리측은 핵폐기를 포함한 북한측의 근본적인 태도 변화가 있어야 정상회담이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는 전언임. 특히 북한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신변 안전 문제를 들어 3차 남북정상회담도 북한에서 열려야 한다고 주장했고, 우리측은 두차례 평양에서 개최된 만큼 이번에는 형평성 차원에서 김 위원장이 답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는 후문임.
- 제3국 남북접촉과 관련, 정부는 현재 공식 반응을 자제한 채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이른바 NCND의 태도를 취하고 있음. 남북 실무접촉이 언론에 잇따라 보도된 것과 관련, 정부의 보안이 허술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음.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 1차 남북정상회담이 철저한 보안 속에 전격 발표됐고 노무현 전 대통령 때도 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직전에 언론에 알려졌던 것과 비교해 이번에는 초기단계에서 남북접촉이 노출됨.

#### ● “北, 이란 통해 시리아에 WMD기술 이전”(10/22)

- 북한이 이란을 통해 시리아에 미사일을 비롯한 대량살상무기(WMD) 기술을 이전하고 있다는 주장이 22일 제기됨.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최근 발간한 ‘이란: 미국의 관심과 정책대응’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시리아에 다양한 형태의 WMD와 미사일 기술을 제공하는데 있어서 이란이 중개자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우려를 제기함. 이 보고서는 그러나 이와 관련된 더 이상의 설명은 하지 않았음.
- 또 이란의 재래식 무기 현황을 전하면서 이란이 북한에서 소형 잠수함을 도입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함. 보고서는 “이란은 수척의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북한에서 조립



- 된 잠수함을 구입했거나 조립 부품을 구입했을 수 있다”고 지적함.
- 이와 관련, 보고서는 이란이 2007년 11월 수중음파탐지기의 추적을 피할 수 있는 소형 잠수함을 생산했다고 주장했었다고 전함. 이 밖에 보고서는 이란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북한 등과 군사분야 협력 관계는 주로 무기 구매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밝힘.

#### ○ “北, 미얀마를 무기이전 중간기지로 활용”(10/22)

- 북한이 미얀마(버마)를 무기 거래의 중간 기지로 활용하고 있으며, 북한의 주요 무기관련 회사가 최근 미얀마에서 매우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됨. 에드 로이스(공화, 캘리포니아) 미국 하원의원은 21일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열린 미얀마 관련 청문회에서 미얀마가 안보상 미국에 위협을 주는 5가지 이유를 소개하면서 이같이 밝힘.
- 로이스 의원은 “우선 북한이 버마를 이용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무기와 금지품을 이전하기 위해 그곳(버마)의 항만과 소형비행장을 이용하고 있다”고 말함. 그는 “우리가 지난 여름 버마로 향하고 있던 북한 화물선에 대해 우려했던 것도 이 때문”이라고 지적함. 그는 또 “두번째로는 버마가 핵프로그램에 이용될 수 있는 기술을 구매했다”면서 핵 커넥션 의혹을 거듭 제기함.
- 로이스 의원은 이어 “셋째로는, 북한의 주요 무기 회사 중 하나가 최근 수개월간 버마에서 매우 활발히 활동해 왔다”고 주장함. 하지만 더 이상의 자세한 사항은 언급하지 않았음. 그는 “지난해 미국이 미사일을 싣고 이란으로 향하던 북한 항공기를 인도와 협력해 저지할 당시 그 항공기가 버마를 통해 오지 않았느냐”고 반문함.
- 이와 함께 그는 “다섯번째(이유)로는, 핵관련 목적이 있다고 일부에서 말하는 (버마) 수도 인근의 광범위한 땅굴 건설에 북한이 도움을 주고 있다는 보도들”이라고 말함.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이에 대해 “의원이 말한 (북한과 미얀마간의) 협력 요소들이 있다”고 관련 의혹을 부인하지 않았음.
- 캠벨 차관보는 “국가안보 문제의 맥락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북한과 버마간의 군사 분야 협력 및 다른 분야의 협력 가능성과 관련돼 있다”면서 북-미얀마 군사협력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거듭 표명함. 앞서 그는 모두발언에서 “버마와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 제기되는 의혹과 우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874호는 탄도미사일 및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을 포함한 민감한 기술은 물론 사실상 모든 재래식 무기를 회원국들이 북한과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함.
- 그는 향후 미국 정부는 미얀마와의 대화에서 “버마와 북한간의 긴밀한 군사 관계와 관련한 확산 우려를 논의할 것”이라면서 “버마는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 1874호 준수를 약속하고 있지만, 그럼에



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얀마의 북한과의 관계의 본질과 범위에 대한 우려를 여전히 갖고 있다”고 말함. 그는 “우리는 북한과 관련된 특정 문제에 대한 우려에 대한 (버마의) 재확인을 받고 싶다”고 말함.

● 佛언론 “北서 김정은 찬양가 만들어져”(10/21)

- “현재 북한에서는 김정일의 막내아들인 김정은에 대한 찬양가들이 만들어 지고 있다.”프랑스 일간지 르 피가로는 20일 아르노 들라 그랑주 기자가 최근 북한을 방문하고 쓴 르포 기사를 게재함. 이 기사에서 신문은, 현재 북한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사안은 김 씨 가문의 3대 세습 문제라면서 평양-베이징 간 기차 안에서 만난 북한 사업가의 말을 인용해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 문제(후계세습)에 대해 이야기한다”고 전함.
- 신문은 “김정일이 후계자로 지목된 것으로 보이며 이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도 찬양가와 함께 만들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신문은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상징하는 ‘김일서니아’나 ‘김정일리아’처럼 김정은을 상징하는 꽃이 이미 창조되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고 전함.
- 이어 신문은 “평양에서는 현재 활발한 공사가 이뤄지고 있는데, 이런 공사는 정확하게 목표기간이 있으며, 그 기간은 1994년 사망한 김일성 주석 탄생 100주년이 되는 2012년 4월15일까지”라면서 그동안 북한의 경제파탄을 보여주는 흉물이었던 류경호텔도 공사가 재개됐다고 밝힘. 신문은 또 “김일성 주석은 여전히 공식 국가원수로 남아있다”면서 “2012년은 북한에서 모든 것의 기준점으로, 그때까지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면 세계 첫 공산 왕조의 권력승계는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함.

● “핵에 밀렸던 北인권문제 검증 직면”<WSJ>(10/21)



- 그동안 핵 문제에 밀려나 있던 북한 인권 문제가 오는 12월 초 유엔 인권이사회와 보편적 정례검토(UPR)가 다가옴에 따라 국제사회로부터 더 강력하게 검증받게 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WSJ)이 21일 보도함.
- 유엔 인권이사회는 12월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북한 인권상황에 관한 보편적 정례검토 회의를 열 예정임.
- WSJ에 따르면 몇몇 국가들의 외교관들과 주요 인권단체들은 북한의 인권 유린에 관한 자료를 재



(서울=연합뉴스) 김토일 기자 = 그동안 핵 문제에 밀려나 있던 북한 인권 문제가 오는 12월 초 유엔 인권이사회 보편적 정례검토(UPR)가 다가옴에 따라 국제사회로부터 더 강력하게 검증받게 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WSJ)이 21일 보도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12월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북한 인권상황에 관한 보편적 정례검토 회의를 열 예정이다.

kmtoil@yna.co.kr  
http://blog.yonhapnews.co.kr/toto4

검토하면서 이 회의에 참석한 북한 관계자들에게 따질 질문들을 준비하는 작업을 하고 있음. 북한이 올해 2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을 한 이후 북한을 다시 6자 회담에 복귀시키기 위한 관련국가들의 노력이 진행되고 최근 북·미 대화도 추진되는 가운데 북핵 협상 관련 외교관들은 북한의 인권 유린 문제는 북한 측의 반발을 우려해 꺼내지 않아 왔음.

- 그 결과 기본적인 자유에 대한 침해와 20만명을 수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집단수용소 문제 등은 국제사회의 주목과 제재를 피할 수 있었음. 그러나 유엔 인권이사회 검토후 이런 상황이 변할 수 있다고 WSJ은 설명함.
- 영국의 외교관은 “핵 문제가 어떻게 되던 간에 이번 북한 인권상황 검토후는 이뤄질 것이고 더 주목받을 것”이라고 말함. 북한은 인권유린에 대한 주장에 대해 북한 정권을 전복시키려는 외국의 모략이라는 주장을 펴왔지만 유엔의 정례검토 절차를 밟기로 함.
- 북한은 지난 8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20쪽 분량의 자체 보고서에서 북한 내에 인권 문제는 없다고 주장하며 자신들이 올해 인권보호를 위해 법을 개정했다고 밝힘.
- 북한은 또 자신들의 인권증진을 위한 노력의 주요 난제는 미국의 적대정책과 유엔과 인권단체들의 반복 선전이라고 주장함. 유엔 인권이사회 정례검토에 따라 인권단체 등은 북한 인권에 대한 자신들의 조사 결과와 질문을 할 수 있게 돼있고, 이에 따라 북한의 인권 유린에 관한 증거들을 수집해온 인권단체들의 활동도 활발해지고 있다고 WSJ은 전함.
- 북한 인권 문제는 다음 달 유엔 총회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유엔 총회는 지난 4년 간 매년 대북인권결의를 채택해 왔고, 올해에도 인권 문제를 다루는 제3위원회가 다음 달 중순께 대북인권결의안을 논의해 표결을 할 것으로 예상됨.

● 北원산-러 블라디보스토크 자매 결연(10/19)

- 북한 원산시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시가 ‘자매관계 설정 및 친선과 협조 강화에 관한 협정’을 19일 원산에서 조인했다고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조인식에는 북측에서 조선-러시아친선협회 위원장인 홍선옥 대외문화연락위원회 부위원장, 리일섭 원산시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러시아측에서 이고르 푸시카료프 시장과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주북 러시아 대사관 공사참사가 참석함.



- 두 도시의 자매결연을 계기로 블라디보스토크시 사진 전시회와 러시아 도시 기증식도 19일 북한 강원도미술전람관에서 열림. 블라디보스토크시 대표단은 18일 항공편으로 평양에 도착해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을 면담함.

## 2. 주변국 관련

### 가. 한·미 관계

#### ● “韓, G20 리더십에 특별한 위치” <美전문가>(10/23)

- “한국은 주요 20개국(G20)의 리더십과 정당성, 대표성이라는 점에서 매우 특별한 위치에 있습니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브루킹스연구소의 콜린 브래포드 비상근 연구위원은 22일 워싱턴 DC 주미한국대사관 코러스하우스 초청강연에서 한국의 내년 G20 정상회의 개최에 대해 국제사회의 기대가 크다면서 이같이 밝힘.
- 브래포드 위원은 “한국은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내년에도 사무총장을 통한 지도력을 유엔에서 계속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제경제와 안보문제 등에서 이해관계를 조정 중재할 수 있는 특별한 위치에 있다”면서 국제사회는 이런 점에서 한국의 역할에 주목한다고 말함.
- 그는 “한국은 G20 회원국들 사이에서 창의적인 조정과 협의노력을 통해 나머지 전 세계 국가들에 대한 영향력을 제고함으로써 G20의 대표성과 정당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함.
- 브래포드 위원은 “한국은 1970년대 이후 지속적인 성장을 이룩한 대표적인 국가로 주요 시장국가 속에서 새로운 권력의 하나로 부상해 G20의 운영위원회에 참가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성취 덕분에 2010년 G20 의장국이자 개최국이 됐다”고 평가함. 그는 이어 “G20 정상회의는 정해진 날 어느 국가의 한 장소에서 선언을 발표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진행되는 과정이라는 측면에서 더 잘 이해될 수 있다”면서 “한국은 2010년 11월 G20 정상회담을 준비하면서 G20의 이런 협의과정을 공고하게 하는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음.
- 브래포드 위원은 또 “한국의 과거 40년여간 발전경험은 G20이 금융위기 이후 금융시장과 국가 및 국제경제에서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의 역할 조정이라는 핵심적인 경제정책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한국경제 성장모델은 국제적인 관심과 연구의 대상이라고 말하기도 함. 브래포드 위원은 미 국무부 산하 미국국제개발처(USAID) 수석 이코노미스트 출신임.





- 성명에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고 게이츠 장관은 “북한의 비핵화를 최우선으로 한다”고 천명함. 그간 채택된 SCM 공동성명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이런 표현이 담긴 것은 한반도 비핵화 추구라는 양국 정부의 원칙에 따른 것으로 풀이됨.
-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앞서 21일 워싱턴D.C에서 가진 미국 평화연구소(USIP) 주최 ‘미국 비확산 정책’ 연설에서 “북한 지도자들은 미국이 핵무기를 가진 북한과 관계를 정상화하거나, 대북 제재를 없앨 것이라는 착각을 해서는 안된다”며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북한의 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현재의 대북 제재는 완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함. 다자간 안보협력을 비롯한 범세계적 안보위협에 긴밀히 대응한다는 데 합의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임.
  - 두 장관은 성명에서 “지역 및 범세계적으로 협력적 관계를 발전시키고 다자간 안보협력 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다”며 “국제 평화유지, 안정화와 재건지원, 인도적 지원과 재난 구조를 포함한 광범위한 범세계적 안보도전에 대처하는 데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강조함. 이는 유엔 평화유지활동을 강화한다는 우리 정부의 견해와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더 많은 기여를 해야 한다는 미국의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됨.
  - 하지만 일각에서는 공동성명에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역할이 크게 부각됨으로써 오히려 우리 군의 자주적 군사력 건설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군 당국이 전작권을 단독 행사하기 위해 자주적인 군사력 건설 방침을 천명하고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미국에 더욱 의존하겠다는 인상을 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것임.

### ● 美, 한반도위기시 전세계 가용병력 배치(10/22)

- 미국은 한반도 유사시 세계 전역에서 가용한 미군 병력과 전력을 한반도에 유연하게 증강배치하기로 함. 또 핵우산과 재래식 타격능력, 미사일방어(MD) 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력을 동원해 한국에 ‘확장억제력’을 제공하기로 함.
- 김태영 국방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은 22일 오전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제41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단독 및 확대 회담을 열고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한 16개 항의 SCM 공동성명을 채택함.
- 게이츠 장관은 공동성명에서 “한반도 위기 시 기존에 배치된 전력을 통해서 뿐 아니라 세계 전역에서 가용한 미군 병력과 능력(전력)을 한·미 연합방위를 위해 전략적으로 유연하게 증강배치해 한국을 방위한다는 미국의 단호하고 확고한 공약을 재강조한다”고 밝힘. 이는 미국 본토와 주일미군 전력 위주로 돼있던 기존 전시증원 전력이 전 세계에 배치된 전력으로 확대될 것임을 의미하는 것임.



- 특히 게이츠 장관은 “미국의 핵우산, 재래식 타격 능력, MD 능력을 포함하는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하여 한국을 위해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한다”고 강조함. 이는 2006년 SCM 공동성명에 처음 등장한 개념인 ‘확장억제’의 구현 수단을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명문화한 것임. 김태영 장관은 이에 사의를 표시했으며 두 장관은 확장억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함.
- 북핵 문제와 관련, 게이츠 장관은 “북한의 비핵화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대화를 통해 한반도에서 긴장을 완화하고 상생과 공영의 남북관계 발전을 추구해 나가려는 한국 정부의 노력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다”고 밝힘. 두 장관은 이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용인하지 않을 것임을 재차 강조하고 북한의 핵실험과 최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와 6자회담 합의사항에 위배될 뿐더러 한국과 주변국,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위협임을 재확인함.
- 또 두 장관은 공동성명에서 “국제평화유지, 안정화와 재건지원, 인도적 지원, 재난구조 활동을 포함해 광범위한 범세계적 안보 도전에 대처하기 위한 양국의 긴밀한 협력을 계속 증진시키기로 했다”며 “지역과 범세계적인 협력적 관계 발전과 다자간 안보협력 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고 밝힘.
- 그간 관심을 끌었던 아프간 파병 여부와 관련, 게이츠 장관은 SCM이 끝난 후 가진 합동기자회견에서 “미국은 아프간 지원과 관련해 한국정부에 구체적으로 제안한 바 없다”며 “한국정부 차원에서 언제, 어느 정도 수준으로 지원할지는 전적으로 한국 정부에 달려있다”고 밝힘. 그는 “그러나 아프간에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아프간 경찰과 군을 확장하는 데 있어서도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고 민간차원의 다양한 프로젝트와 경제재건에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해 파병보다는 경제적 지원에 무게를 뒀음.
- 이어 두 장관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작업에 대해 ‘전작권 전환이 전략적 전환계획에 따라 순조롭게 이행되고 있다’는 연합사령관의 보고를 받고 기존 합의된 2012년 4월17일 전환 일정을 재확인함. 게이츠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2012년 4월17일 전환을 절대적으로 확신한다”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환작업) 수준에 만족한다”고 강조함.
- 그는 전작권 전환에 따른 한국민의 불안감을 감안한듯 “한국이 완전한 자주방위 역량을 갖추기 때까지 구체적이고 상당한 보완전력을 계속 제공할 것”이라며 “동맹이 지속되는 동안 연합방위를 위해 지속적인 전력을 제공한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한다”고 강조함.
- 이밖에 두 장관은 주한미군 기지이전과 반환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도록 긴밀히 협력하고 올해 말까지 캠프 하야리아를 포함한 7개 시설이 반환되도록 노력하기로 함. 제42차 SCM은 내년 워싱턴 D.C에서 개최하기로 함.



### ● 美합참의장 “한·미동맹 공고히 확대”(10/21)

- 한국과 미국은 21일 서울에서 제31차 한·미군사위원회(MCM)를 열고 한·미군사동맹 전반에 관한 관심사와 현안을 협의함.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용산 합동참모본부 회의실에서 열린 MCM에는 우리 측에서 이상의 합참의장과 김기수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이, 미 측에서 마이클 멀린 합참의장과 로버트 윌러드 미 태평양사령관이 각각 대표로 참석함.
- 멀린 의장은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 앞선 모두 발언에서 “한·미동맹은 보다 공고히 확대될 것으로 믿는다”며 “오늘 MCM과 내일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매우 생산적인 논의가 많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함. 그는 이상의 의장의 취임을 축하한 뒤 “의장님의 탁월한 리더십 하에 한·미동맹 관계가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함. 이에 이 의장은 “회의 참석자들이 전략적 식견과 혜안을 토대로 허심탄회하고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당부함.
-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등 군사적 위협을 평가하고 한국군의 능력과 연합방위태세 발전 방안을 집중 협의함. 특히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해 미국이 우리나라에 제공기로 한 ‘확장억제력’을 구체화하기 위한 전략적인 계획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데 공감한 것으로 알려짐.
- 양국은 또 2012년 4월17일부로 한국에 이양기로 합의된 전작권전통제권 전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차질없는 이행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짐. 합참의 한 관계자는 회의가 끝난 뒤 “한국 합참이 올해까지 구축기로 한 기본운용능력(IOC)에 대한 검증결과 등 전작권 전환과 관련된 준비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힘. 그는 “양국 정상이 합의한 한·미동맹 미래비전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군사적 과제들을 합의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음.
- 합참 관계자는 이어 “양국 합참의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연합방위태세의 공고함을 재확인했다”며 “전작권 전환 준비를 포함한 양국 군사현안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 ● 게이츠 “韓 안보기여자..적정 투자해야”(10/21)

-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부 장관은 21일 “과거 한국의 파병은 미국을 위한 것으로 여겨졌지만 앞으로 한국의 국제적인 군사기여는 한국의 안보와 핵심적인 국익에 도움되는 것으로 인식돼야 한다”고 말함. 게이츠 장관은 이날 오후 용산 연합사 대강당에서 연합사 장병들을 상대로 가진 연설에서 “한국의 국제적인 군사 기여는 있는 그대로 봐야 한다”며 이같이 밝힘. 그가 한국의 국제적 군사기여에 대해 언급한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으로, 최근 쟁점으로 떠오른 아프가니스탄 파병 문제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됨.
- 게이츠 장관은 “한국은 지난 반세기 동안 베트남과 이라크 등에서



미군과 함께 싸워왔으나 이제 한국의 국제 군사적인 역할에는 다른 논리와 역학관계가 있다고 본다”며 “한국의 정치 지도자들은 한반도 방어와 더불어 세계 안보에 대한 기여자로서 한국의 부상하는 역할에 맞게 적절한 투자를 해야 한다”고 강조함. 그는 또 한국군의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지지한다고 밝히고 “그런 현대화에 대한 답 대한 계획은 유연하고 즉각 배치가 가능하며 효과적인 힘을 제공할 것”이라며 “이런 미래의 능력은 한반도 방어 능력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지역과 세계 안보에 더욱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함.

- 게이츠 장관은 특히 “북한이 핵무기를 추구하고 핵기술과 탄도미사일 및 그 부품을 확산하려는 것은 한반도뿐 아니라 아태지역 안정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오늘도 미래도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함. 그는 “북한의 지상군 공격력은 갈수록 약해지고 있지만 핵무기를 통한 위협은 증대되고 있어 역내 안정을 해치는 불안정 요소로 대두되고 있다”며 “바로 그런 이유에서 한·미 간 협력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의 다른 동반자와도 힘을 모아 위협을 억제하길 희망한다”고 밝힘.
- 게이츠 장관은 또 “북한이 종래와 같은 지상침략을 일으킬 능력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북한의 무장력은 한국에 여전히 엄청난 파괴를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지적하고 북핵에 대해서도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함. 그는 “이 같은 노력을 위해 미국은 핵우산과 재래식 공격, 그리고 미사일 방어에 대한 능력까지 모든 미국의 군사적인 힘을 총동원해 확장억제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함.
- 2012년 4월17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와 관련, 게이츠 장관은 “2012년의 전작권 전환은 (한국군이) 더 큰 책임을 갖게 되는 일련의 과정의 절정이 될 것”이라고만 언급, 전환시기 조정 문제는 거론하지 않았음.

#### ● USTR “한·EU FTA 주의 깊게 고려할 것”(10/20)

-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과 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의 내용을 주의 깊게 고려하면서 한·미 FTA를 계속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USTR은 19일 캐럴 거스리 대변인 이름으로 발표한 ‘한·EU FTA 예비분석’ 자료를 통해 “최근 가서명한 한·EU FTA는 한·미 FTA와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다”며 “한·EU FTA를 주의 깊게 고려하면서 한·미 FTA를 계속 검토(review)할 것”이라고 말함.
- 이는 미국이 그동안 받은 한·미 FTA에 대한 미국 내부의 의견과 한·EU FTA 분석 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한국 측에 모종의 새로운 제안을 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됨. USTR은 “협정문 내용과 무역 일정을 분석해 보면 한·EU FTA는 많은 면에서 한·미 FTA와 유사한 포괄적인 협정”이라며 공산품에 대한 관세철폐 비율과 기간을 비교 설명함.



- 특히 자동차 관세에 대해 한·EU FTA와 한·미 FTA의 차이를 비교 분석, 미국 자동차 업계의 우려를 비중있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내비침. USTR은 “한국과 EU가 승용차 관세를 3년 내지 5년 안에 철폐한다”면서 “한·미 FTA에서는 한국의 8% 관세는 즉시 철폐되고 미국은 소형차에 대해 2.5% 관세는 즉시 없애면서 3천cc이상 대형차는 3년 뒤 철폐하기로 했다”고 말함.
- 또 “트럭의 경우 한·미 FTA는 한국의 10% 관세를 즉시 철폐하고 미국은 10년에 걸쳐 25%의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지만 한·EU FTA에서는 한국 대부분의 트럭 관세를 즉시 없애고 EU는 3년 내지 5년에 걸쳐 22%의 관세를 없앤다”고 설명함. 자동차 ‘스냅백 (snap back)’에 조치에 대한 언급도 있었음.
- 한·EU FTA는 스냅백을 허락하지 않았지만 한·미 FTA는 이 조항이 있는데, 스냅백은 양측이 자동차 관련 합의사항을 어기면 관세를 원상회복하는 조치로 한국에 불리한 독소조항이라는 지적이 있었음. 이와 함께 USTR은 한국의 자동차 안전기준 문제를 거론, “이 문제를 더 상세히 들여다보고 이해 관계자들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함.
- USTR은 또 한·미 FTA에 포함된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ISD) 등 투자보호 사항이 한·EU FTA에는 빠졌고 서비스시장 개방 방식이 한·미 FTA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한·EU FTA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접근한 것을 비교함. 포지티브 방식의 개방은 개방 대상을 일일이 열거하는 것이며 네거티브 방식은 개방하지 않을 것만 열거하고 나머지는 모두 문호를 여는 것임.
- USTR은 이어 미국과 EU의 대(對) 한국 무역관계를 비교하며 “미국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의미 있는 시장 접근을 담보하기 위해 한·미 FTA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함. USTR은 “(한·미 FTA를) 검토하면서 쟁점들에 대해 300개 이상의 의견을 접수했는데 일부는 지지를, 일부는 우려를 나타냈다”며 “주요 미국 자동차회사는 한국의 역사적이고 오래된 이 분야의 무역장벽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끝을 맺었음.

#### 나. 한·일 관계

##### ● 日, 김현희-황장엽씨 초청..정부 “검토할것”(10/23)

- 방한 중인 일본 나카이 히로시(中井治) 공안위원장 겸 납치문제 담당상이 23일 우리 정부에 대한항공 항공기 폭파범인 김현희씨와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의 일본 방문을 공식 요청할 것으로 알려짐. 히로시 공안위원장은 22일 저녁 한국에 도착했으며 이날 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 정보당국 고위당국자와 면담할 예정이라고 외교소식통들이 전함. 한 외교소식통은 “히로시 위원장이 두 사람의 방일을 요청하면 이를 검토할 것”이라며 “아직까지 결정



난 것은 없다”고 말함.

- 이와 관련, 우리 정부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입장 하에 일본측과 구체적인 방일시기와 조건 등을 협의할 것으로 알려짐. 외교 소식통들에 따르면 김현희씨는 일본 방문을 적극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지난 8일 정례 브리핑에서 김현희씨의 방일문제에 대해 “아직 (일본으로부터) 구체적인 제안은 받지 않았지만 본인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제의가 오면 본인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 황장엽 전비서의 경우 정부는 일본이 공식 초청해올 경우 본인의 의사를 물어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짐. 이와 관련, 일본 아사히신문은 22일 한국 정부가 황 전비서의 일본 방문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으나 본인의 의사는 최종 확인되지 않고 있음. 한 소식통은 “황씨가 당초 일본 방문을 희망했던 것으로 알고 있으나 본인의 최종적인 뜻은 모르겠다”고 말해, 경우에 따라 황씨의 방일이 성사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보임.

#### 다. 한·러 관계

##### ● 韓-러 문화교류 정례화하기로(10/21)

- 우리나라와 러시아가 내년 수교 20주년을 맞아 문화교류를 정례화하기로 함. 모스크바 한국문화주간을 맞아 러시아를 찾은 문화체육관광부 박광무 문화예술국장은 20일(현지시간) “양국 정부가 국장급 고위 실무회의를 통해 문화교류를 정례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힘.
- 박 국장은 “상호주의, 쌍방향주의, 선택과 집중이라는 세 가지 기본 원칙에 따라 양국 간 문화교류 협력을 정례화하기로 했다”며 “수교 20주년을 계기로 양국이 ‘어울림과 젊음’이라는 두 가지 지향점을 가지고 미래 지향적 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함.
- 양국은 현재 내년 수교 20주년 기념행사를 위한 실무위원회를 구성, 구체적 프로그램을 협의 중이며 특히 외교 채널을 통해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 또는 블라디미르 푸틴 총리의 방한 일정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짐.
- 앞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 3월 모스크바를 방문, 알렉산드르 아브데예프 러시아 문화장관과 만나 내년 5월 개최하는 한·러 수교 20주년 기념행사의 기본방향과 2011년까지 진행될 정부 간 문화 교류 계획서에 서명하고 이를 교환함.

#### 라. 미·일 관계

##### ● 日총리 “후텐마문제 초조해할 것 없어”(10/23)

-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일본 총리는 23일 주일미군 후텐마(普天間) 비행장 이전 문제를 둘러싸고 미·일간 대립이 고조된다는 국내외 언론의 보도와 관련, “서로 얼마나 리스크(위험)를 회피



하느냐가 중요하다. 그것이 외교다. 모두 지금부터다. 그렇게 초조해질 것 없다”고 밝힘. 그는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해 미국측의 조기 결정 요구에도 서둘러 결론을 내리지는 않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함.

- 히라노 히로후미(平野博文) 관방장관은 하토야마 총리가 내년 1월 후텐마 기지 이전 예정지인 오키나와(沖繩)현 나고(名護)시의 시장 선거 이후까지 이전 문제에 대한 결론을 유보하겠다는 뜻을 최근 밝혔던 점과 관련, “정부 방침으로서 공식적으로 (절차를) 밟은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함. 그러면서 그는 “종합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판단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함.
- 하토야마 총리는 “(슈와브 연안) 이외의 다른 이전지를 정해 빨리 옮기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 빨라지면 오키나와 현 민들에게는 더욱 바람직한 것 아니냐”라고 나고시 이외의 이전지를 선택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함.
- 한편, 게이츠 장관은 지난 21일 기타자와 도시미(北澤俊美) 일본 방위상과 회담에서 후텐마 비행장 이전 문제와 일본의 아프가니스탄 재건 지원과는 “세트가 아니다”라면서 분리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전함. 이는 아프간 추가 지원을 통해 후텐마 비행장 이전 문제에서 미국측의 양보를 얻어 보려는 하토야마 정권의 기대를 사전에 차단한 것으로 해석됨.

### ● 日외상 “미군 기지 이전 주민의견 존중해야”(10/23)

- 일본의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외상은 22일 미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오키나와(沖繩) 주둔 미 해병기지의 이전 문제와 관련해 미국이 민주적 절차를 존중할 것을 촉구함. 오카다 외상은 미국의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이 전날 일본 측에 대해 후텐마(普天間) 비행장의 이전과 관련, 이미 합의된 대체기지 건설 계획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 데 대해 이같이 밝힘. 이 문제는 지난달 출범한 일본의 중도좌파 정권이 미국과의 굴종적인 관계를 시정하겠다는 태도를 보임에 따라 미-일 양국의 안보동맹으로까지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음.

### ● “美, 오바마 방일전 후텐마 결론 요구”(10/22)

- 미국 정부가 미·일 간 논란이 되고 있는 주일미군 오키나와(沖繩)현 후텐마(普天間) 비행장 이전 문제와 관련, 내달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방일 때까지 결론을 내 줄 것을 요구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22일 전함. 신문에 따르면 지난 20일 열린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과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일본 외상과의 회담 자리에서 게이츠 장관이 내달 12~13일 오바마 대통령의 방일 때까지는 결론을 내 달라고 요청함. 이에 대해 오카다 외상은 “가능한 한 조기에 결론을 내겠다”라고만 답변함.



### ● 日 “美주도 작전 대신 UN평화활동 집중”(10/21)

- 일본 정부는 미국이 주도하는 군사 작전에서 벗어나 유엔 주도의 평화 구축 활동에 집중하는 쪽으로 초점을 바꿀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외상은 도쿄의 한 연설에서 이같이 말하고, 유엔이 지원하는 국가 재건 활동에 일본 군을 더욱 쉽게 파병할 수 있도록 법안 마련이 가능한지 검토하도록 외무성에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전 집권당인) 자민당은 유엔보다는 일-미 안보 공조라는 틀 안에서 자위대를 활용해왔다”면서 “그러나 나는 일본이 평화 구축 활동에서 더 큰 역할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 한편, 기타자와 도시미(北澤俊美) 방위상은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과 회담에서 미국과 공동으로 추진 중인 미사일 방어(MD) 계획을 완료하기 위한 자금이 부족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고 일본 정부 당국자가 21일 전했다. 기타자와 방위상은 “MD 계획의 절반은 완료됐지만, 나머지 절반에 대해서는 무엇을 해야할 지 검토하고 있다”며 “MD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지만 재정 당국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고 이 당국자는 덧붙였다.

### ● 게이츠-오카다 회담..후텐마 이전 이견(10/20)

- 아시아 순방에 나선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이 20일 일본에 도착,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외상과 회담을 하고 주일미군 후텐마(普天間) 기지의 이전 문제와 관련, 미·일 정부 간 기존 합의안을 준수할 것을 요청함. 게이츠 국방장관은 회담에서 “현행 안이 유일하고 실현 가능한 방안이다”라며 “미·일 간 합의에 따라 주일미군 재편을 착실히 실시할 필요가 있으므로, 조기에 결론을 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고 교도(共同)통신이 전했다.
- 이에 대해 오카다 외상은 “곤란한 정치상황을 이해해 달라”며 조기에 결론을 내는 것은 곤란하다는 방침을 밝힘. 양국 정부는 지난 2006년 오키나와(沖縄)현 기노완(宜野灣)시에 있는 후텐마 기지를 2014년까지 같은 현 나고(名護)시에 있는 주일미군 슈와부 기지 연안부로 이전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
- 그러나 지난달 출범한 민주당 정권은 8·30 총선 공약에서 후텐마 기지의 현외 또는 국외 이전을 내걸어 양국 간 논란이 돼 왔음. 회담에서 오카다 외상은 인도양에서 해상자위대의 다국적군 함대에 대한 급유지원 활동과 관련, 이의 근거가 되는 법이 내년 1월에 만료되는 만큼 해상자위대 철수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고 게이츠 장관은 “일본이 결정할 문제”라고 이해를 표시함.
- 이에 오카다 외상은 아프가니스탄 부흥 지원 문제에 대해 “일본이 뛰어난 분야를 최대한 살려서 지원책을 만들고 있다”고 말해 민생 분야를 중심으로 한 지원 강화 방침을 전달함. 오카다 외상은 또 “미·일 동맹의 중요성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30년, 50년 지속 가



능하게 하고, 양국 동맹을 더욱 심화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함.

- 그러면서 그는 “몇 개 구체적인 문제가 있으나 협의해서 긍정적으로 극복해 미·일 안보조약 개정 50년이 되는 내년은 동맹관계를 깊게 하는 해로 만들고 싶다”고 강조함. 이에 대해 게이츠 장관은 “미·일 동맹은 우리나라 아시아 안전보장 정책의 초석이다”고 답함. 미국 관료의 일본 방문은 지난달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정권 출범 이후 처음임.
- 앞서 게이츠 장관은 하와이에서 도쿄로 이동하는 사이에 전용기 내에서 기자들과 만나 후텐마 기지 이전 문제와 관련, “여러 대체 방안을 검토했지만, 그것은 정치적인 것이거나 운용면에서 실행불가능한 것 중의 하나였다”라고 현행 계획 이외에는 해결방안이 없음을 분명히 함.
- 그러면서도 그는 대체시설의 구체적인 건설 위치에 대해서는 “유연성이 있다”고 밝혀 당초 계획보다 바다 쪽으로 조금 이전하는 것은 ‘경미한 수정’으로 수용할 수 있음을 시사함. 이 밖에도 게이츠 장관과 오카다 외상은 내달 벵골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방일을 앞두고 북핵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 등 양국 간 관심사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함. 게이츠 장관은 21일에는 하토야마 총리, 기자들과 도시미(北澤俊美) 방위상과 회담한 뒤 한국 방문길에 오름.

#### ● 日 외상 “미와 핵 선제 불사용 논의”(10/19)

-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일본 외상은 18일 미국에 의한 핵무기 선제 불(不)사용 선언 문제를 “미·일 간에 확실히 논의하고 싶다”고 밝혔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19일 전함. 신문에 따르면 그는 18일 교토(京都)에서 가진 강연에서 이같이 밝혀 미국측이 핵무기를 먼저 사용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도록 노력할 방침임을 분명히 함.
-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핵 억지력이란 측면에서 미국이 핵 선제 불사용 선언을 하는 데는 반대 입장이었음. 오카다 외상은 “(일본 정부가) 일방적으로 핵 폐기를 강하게 주장하면서, 자기들을 위해서는 선제 사용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은 모순된 행동 아니냐는 점은 논란거리”라며 “선제 불사용이라는 큰 방향성은 부정할 수 없다”고 말함.
- 히로시마(廣島)에서 같은 날 열린 ‘국제 핵비확산·군축위원회’ 본회의에서도 핵 선제 불사용 문제가 논의돼, 내년 초에 만들 위원회 보고서에 포함될 것을 관측되고 있음. 오카다 외상은 보고서가 만들어지는 단계에서 미국측에 논의를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힘.



## 마. 중·일 관계

### ● 日정부 카디르 방일 승인..中반발(10/20)

- 일본 정부가 위구르족 망명 지도자인 레비야 카디르(62)의 방문을 허가하자 중국이 반발하고 있음. 마자오쉬(馬朝旭)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카디르의 방일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이 문제에 대해 매우 불만족스러워 하고 있다고 밝힘.
- 중국 정부는 카디르를 지난 7월 신장위구르 자치구에서 발생한 유혈 폭동 사태를 선동한 ‘주범’으로 여기고 있음. 이에 앞서 이름을 밝히지 않은 일본 정부 관리가 정부가 법률에 따라 카디르에게 입국 비자를 발급했다고 전하면서, 이는 비판받을 만한 일이 아니라고 19일 밝힘. 또 다른 일본 정부 소식통은 정부가 정치적 활동 자제 같은 제약 조건 없이 카디르에게 비자를 발급해 줬다고 전함.
- 이와 관련, 지지자들은 카디르가 다음달 초까지 일본에 머물면서 도쿄(東京) 시내 대학들 및 규슈(九州) 등지에서 열리는 교환행사에 참석하는 한편, 자신에 관한 서적의 출판 기념행사에도 참석할 것이라고 밝힘.
- 카디르는 7월 방일 당시 집권 여당이던 자민당을 찾은 바 있지만, 이번에는 어떤 정당도 방문하지 않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짐.

### ● “中, IMF투표권 日제치고 2등 된다”(10/19)

-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중국의 투표권이 일본을 제치고 미국에 이어 두번째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중국과 홍콩 언론들이 보도함. 반관영 통신사인 중국신문사는 고테가와 다이스케(小手川大助) IMF 일본사무소장이 17일 글로벌 국제포럼에 참석해 2011년 1월에 끝나는 IMF 개혁 이후 현재 6위의 투표권을 가진 중국이 일본을 제치고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투표권 보유 국가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고 18일 보도함. 이같은 내용은 홍콩 문화보를 통해서도 보도됨.
- IMF 회원국들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상대적인 규모와 IMF에 대한 재정 부담금, 투표권 등에 따라 지분율을 배정받고 있으며 중국의 현재 지분율은 3.72%로 6위를 기록하고 있음. 현재 IMF 지분율 1위는 미국으로 17.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본은 6.1%로 2위를 차지하고 있음.
- 고테가와 소장은 “중국이 IMF에서의 투표권이 늘어나면 그에 따르는 책임도 커질 것”이라면서 “중국 입장에서는 또 다른 도전이 될 것”이라고 말함. 그는 “IMF의 지배구조 개혁에서 유럽국가 지분율이 줄어들어 패자가 될 것이며 중국을 비롯한 브릭스 국가 및 신흥경제국은 지분율이 늘어나 승자가 될 것”이라고 말함.
- 중국은 지난달 IMF가 재원 확충을 위해 처음으로 발행하는 ‘SDR(특별인출권) 채권’을 최대 500억달러 어치 매입키로 하는 등 IMF



에서의 위상과 권한 강화를 추진해 왔음. 이런 가운데 최근에는 주민(朱民) 중국은행 부행장이 IMF의 부총재로 임명된다는 소문이 파다해 중국 금융가가 주목하고 있음.

- 한편 이번 포럼에 참석한 일본 재무성 고문인 스키모토 가즈유키(杉本和行)는 “내년 상하이엑스포가 끝나면 중국의 명목 GDP가 일본을 초과해 세계 2위로 올라설 것”으로 전망하면서 “중국, 일본에다 한국과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등을 합치면 아시아 국가의 경제규모가 세계의 5분의 1을 차지해 세계에서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함.

## 바. 기타

### ● 韓·아세안, ‘전략적 동반자관계’ 격상검토(10/24)

-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태국의 휴양지 후아헌에서 열린 한·아세안(ASEAN) 정상회의, 아세안+3 정상회의에 잇따라 참석했음. 이 대통령과 아세안 정상들은 이날 오전 두싯타니호텔에서 정상회의를 갖고 ‘한·아세안 현인그룹(EPG)’ 최종보고서의 권고대로 한·아세안 관계를 현행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음.
- 이 대통령은 또 저탄소 녹색성장 분야에서 동아시아 기후파트너십 기금 2억달러 중 1억달러를 대(對) 아세안 협력사업에 활용하기로 했으며 대(對) 아세안 ODA(공적개발원조) 규모를 2015년까지 작년의 2배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음.
- 이 대통령은 이어 오는 2010년부터 기후변화 대응 분야에서 한·아세안 그린 파트너십을 추진하고 아세안과 함께 아시아산림협력기구 설립도 추진하겠다고 말했으며, 싱가포르와 필리핀, 인도네시아에 한국문화원을 신설해 한·아세안 문화교류를 위한 거점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음.
- 이 대통령은 오후에는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 등 13개국 정상들이 참여하는 아세안+3 정상회의에 참석, 북핵 일괄타결 방안인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구상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북핵 부분 동결에 대해 보상을 하고 북한이 약속을 어기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과거의 패턴에서 벗어나 완전하고 비가역적인 해결을 위한 일괄 타결방안을 제시했다”면서 “북한이 핵 포기 결단을 내리고 조속히 6자회담에 복귀하도록 (아세안+3) 정상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 아세안 정상들은 내년 11월 한국에서 개최되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대해 기대를 표명했고, 이 대통령은 행사 준비 과정에서 아세안 개도국의 관심사항을 적극 수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음.
- 아피싯 웨차치와 태국 총리는 “태국이 올해 아세안 의장국으로 G20 회의에 참여한 만큼 내년 한국 회의에 내년 아세안 의장국인 베트남



남도 참여했으면 한다”고 말했고, 이 대통령은 “공정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캐나다 G20회의는 한국이 공동의장국이므로 캐나다와 협의해 참석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음.

- 이 대통령은 경제·금융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국제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역내 금융위기 대응을 위해 총 1천200억달러 규모의 차앙마이 이니셔티브(CMIM) 공동기금 체제가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회원국간 협조를 당부했음. 또 아세안 지역의 식량 안보 지원을 위해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사업’의 조속 실현을 기대하고 15만t 규모의 쌀을 한국 정부의 약정물량으로 설정했다고 밝혔음.
- 이 대통령은 이날 부아손 부파반 라오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라오스의 에너지·자원 분야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으며 라오스의 경제발전을 위한 한국의 개발경험 공유와 유·무상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음.
- 이 대통령은 25일에는 아세안+3 국가 및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16개국 정상들이 참여하는 EAS(동아시아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케빈 러드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뒤 동남아 3개국 순방을 모두 마치고 밤늦게 귀국함.

#### ● 타이베이-서울포럼 23-24일 개최(10/23)

- 타이베이(臺北)-서울포럼이 타이베이 아태회관(亞太會館)에서 23일부터 24일까지 개최됨. 서울국제포럼(회장 김달중)과 대만 국립 정치대학 국제관계연구소 공동 주최로 열리는 이 포럼에는 한국과 대만의 학자와 전문가 수십명이 참석, ‘동아시아에서의 지역 및 비전통 안보 : 도전과 협력’을 주제로 4개 소주제 회의와 원탁회의가 마련됨.
- 23일에는 ▲국내정치와 정부의 활동 ▲신경제질서와 새 성장동력 ▲에너지와 기후변화 소주제 회의가 열리며 24일 ▲한반도와 양안 관계 상황의 안보적 의미로 소주제 회의에 이어 ‘대만-한국 간 동반자관계에 관한 새 사고’를 주제로 원탁토론 회의가 각각 펼쳐짐. 타이베이-서울 포럼은 매년 대만과 한국에서 번갈아 개최되며 올해가 18회째임. 1980년대에 설립된 서울국제포럼은 한국의 학계, 정치, 경제 등 분야 지식인들로 구성돼 있으며 한국과 중국 간 교류에도 역점을 두고 있음.

#### ● 美 “대만, 미-중정상회담 우려 불필요”(10/23)

- 11월 열리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이 대만을 포함한 모두의 이익이 되기 때문에 대만 정부가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대만 주재 미 대표가 22일 밝혔다고 대만 신문들이 23일 보도함.
- 대만에서 미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미국대만협회(美國在臺協會)



윌리엄 스탠튼 대표는 중국은 세계에서 중요한 국가 중 하나이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이 협력적인 관계를 모색하는 것은 대만을 포함한 모두의 이익이라고 말함.

- 주한미대사관 부대사에 이어 올해 8월 대만에 취임한 스탠튼 대표는 정상회담에서 대만 문제가 거론되었지만 미-중 양국은 기후변화와 지역안보 같은 세계적 문제들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함.
- 그는 오바마 행정부 아래에서 미국의 대만에 대한 정책들이 변하지 않았으며 대만 방위에 필요한 무기들을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1979년 제정된 미국의 '대만관계법'은 개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 스탠튼 대표는 30년 전 제정된 대만관계법이 미, 중국, 대만 정세의 변화 등 새로운 현실 하에서 개정할 필요가 없느냐는 질문에 "대만 관계법은 미국에 아주 잘 기여해 왔다"고 지적하고, "이 법은 미국의 이익과 가치를 반영하며 이익과 가치는 미국과 대만 관계의 튼튼한 기초"라고 밝힘.
- 그는 또 20일 발표된 대만 국방보고서가 중국이 군사력을 계속 증강하고 있다고 평가한데 대해 미국은 동의하며 대만이 필요한 방위 무기들을 계속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첨단 F-16C/D 전투기 66대를 판매할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함.
- 스탠튼 대표는 자신이 천수이벤(陳水扁) 대만 전 총통 재판에 간섭하는 발언을 했다고 일부 대만 언론과 입법위원들과 전문가들이 비판한데 대해 왕칭펑(王清峰) 대만 법무부장을 9월30일 만나 "많은 문제들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미 일부 인사들이 천 전 총통 재판에 대해 언급하거나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지적했을 뿐"이라면서 간섭할 의도는 없다고 해명함.

#### ● 한·칠레 FTA 협정 개선 논의(10/23)

- 한국과 칠레는 23일 화상회의 방식으로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제6차 자유무역위원회 열고 협정 개선 문제를 논의했다고 외교통상부는 밝힘.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FTA 발효 후 5년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한·칠레 FTA가 발효된 지 상당 기간이 지난 것을 고려해 그간의 상황 변화를 고려한 협정 개선(upgrade) 필요성을 논의함.
- 우리 측은 한·칠레 FTA 발효 후 중국과 일본이 칠레와 FTA를 체결하면서 칠레 시장에서 중국, 일본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는 철강, 냉장고, 세탁기 등 일부 품목(관세 6%)에 대한 양허 개선 필요성을 강조함. 반면 칠레 측은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 종료 이후 협상하도록 되어 있는 소위 'DDA 품목'에 대해 일정을 앞당겨 관세 철폐에 대한 협상을 시작할 것을 요구함.
- 양국은 2002년 10월 FTA 협상 타결 당시 약 400개의 칠레산 농산물에 대한 관세철폐 문제는 WTO DDA 협상이 종료된 이후 협상



키로 했으나 DDA 협상이 애초 기대와 달리 장기화하면서 칠레가 이들 품목에 대한 조기 협상을 요구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 측은 DDA 품목은 애초 합의된 대로 DDA 협상 종료 후 협상을 해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고 외교부는 전함.

- 양측은 앞으로 전반적인 협정 개선 방향은 차기 자유무역위원회 개최 시까지 수석대표 간에 지속적으로 대화해 나가기로 함. 차기 자유무역위원회는 내년 하반기 칠레에서 개최될 예정임. 이번 회의에 우리 측은 이태호 외교부 FTA 정책국장이, 칠레 측은 로드리고 콘트레라스 외교부 양자경제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함.

#### ● 中 아시아 6개국과 235억달러 통화스와프(10/22)

- 중국이 금융위기 과정에서 동아시아 6개국과 200억달러 이상의 통화스와프 협정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남. 반관영 통신인 중국신문사의 22일 보도에 따르면 정샤오송(鄭曉松) 중국 재정부 국제사장은 기자회견에서 작년 금융위기를 맞아 한국, 일본,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6개국과 쌍방간 화폐를 호환할 수 있도록 총 235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힘.
- 중국은 이 중 165억달러를 출자하기로 함. 정 사장은 중국이 작년 이후 통화스와프 협정 체결 과정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중국과 동아시아 각국은 지난 수년간 국제통화기금(IMF)에 예속되지 않기 위해 통화의 다변화, 아시아채권시장 발전 등을 공동으로 추진,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힘.
- 그는 아시아 각국이 IMF로부터 독립을 추구하는 내용을 담은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의 정신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전제하고 이와 관련해 아시아 공동 외환보유고 구축과 아시아 공동 채권시장 건설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함. 그는 중국이 앞으로도 동아시아 6개국과 공동으로 지역경제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동아시아 금융시장 안정과 경제체제 통일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힘.

#### ● 韓·캄보디아, 한국인 상용비자 연장 합의(10/22)

- 이명박 대통령과 훈센 캄보디아 총리는 22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캄보디아에 체류하는 한국인의 상용비자 기간을 대폭 연장하기로 합의함. 이 대통령은 이날 프놈펜 외교부 청사에서 가진 정상회담에서 현행 한달에 불과한 캄보디아 체류 한국인의 상용비자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고, 훈센 총리는 한국대사관이 추천하는 자에 대해서는 상용비자 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겠다고 밝혔다고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이 전함.
- 이에 따라 캄보디아에서 사업을 하는 한국인들은 지금까지 매달 비자를 갱신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상당수가 이 같은 불편을 덜게 됨. 두 정상은 또 당초 한국이 캄보디아에 지난해부터 오는 2011년까지 총 1억2천만달러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유상지원하



려던 것을 올해부터 2012년까지 최대 2억달러를 유상지원하는 것으로 개정, 지원기간 및 규모를 확대함.

- 두 정상은 대(對)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규모 확대 및 동아시아 기후파트너십을 통한 녹색성장 지원에 대해서도 합의함. 두 정상은 이와 함께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캄보디아 광물자원청 간의 ‘광물자원 공동연구 및 기술정보교류 양해각서(MOU)’를 체결, 캄보디아 유망광상지역을 공동개발하기로 함.
- 또 양국 산림청간 조림협력 양해각서를 체결, 캄보디아가 제공하는 20만ha(제주도의 1.1배 크기)에 대규모 조림사업을 펼치기로 했으며, 방송통신위원회와 캄보디아 공보부 간 ‘방송콘텐츠 공동제작 양해각서’, 양국 상공회의소간 협력 양해각서 등 모두 6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함. 두 정상은 아울러 범죄인 인도협정에 서명, 양국 법에 의해 최소 2년 이상의 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 상호 인도 조치하기로 함.
- 양국 정상은 이 밖에 양국간 경제발전 경험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한국이 캄보디아 경제정책 전반을 대상으로 포괄적 컨설팅을 추진하기로 함.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은 “이는 캄보디아가 국가발전 계획을 세울 때 개발 시스템, 즉 표준화를 우리측이 함께 마련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함.
- 북핵 문제와 관련, 훈센 총리는 남북이산가족 상봉 장면을 TV로 봤다고 말한 뒤 “남북관계 개선에 좋은 조짐들이 있는 것 같다”면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 입장을 표한다. 북한이 6자회담 복귀해야 한다”고 밝힘.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를 적극 지지해줘 감사하다. 북한의 6자회담 복귀가 핵 포기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북핵 ‘그랜드 바겐’을 설명하고 “핵포기의 대가로 대규모 경제지원을 하자는 것인데 북한도 관심이 있을 것”이라고 말함. 캄보디아는 지난 97년 우리나라와 재수교했으며, 우리나라 대통령으로는 2006년 노무현 대통령에 이대통령이 두번째로 국민방문함.

#### ● “선제 핵공격 2025년까지 폐기돼야”(10/21)

- 국제 핵비확산군축위원회(ICNND)는 세계의 모든 핵무기 보유국이 오는 2025년까지 선제 핵공격을 금지한다는 독트린에 합의할 것을 촉구함. ICNND는 20일 일본 히로시마(廣島)에서 열린 3일간의 회의를 마치면서 이같이 합의하고 핵무기 감축 결의안도 마련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감축 목표는 공개하지 않았음.
- 가와구치 요리코(川口順子) 전 일본 외상과 가렛 에반스 호주 외무장관이 공동의장으로 참여한 ICNND는 당초 계획했던 초안의 내용보다는 다소 물러난 목표에서 합의한 것으로 보임. 당초 마련한 초안에서는 2025년까지 핵탄두를 현 2만기 수준에서 1천기 이하로 줄이는 한편, 핵무기 보유국들이 선제 핵공격을 금지하는 독트린에



합의하는 내용이 담겼었음.

- 가와구치 공동의장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목표 수치는 의욕적이고 또 현실적인 것”이라며 원자폭탄 피폭 생존자들이 이번 회의 결과에 만족할 것이라고 말함. ICNND는 또한 회의에서 미국과 러시아가 2012년까지 전략핵무기 감축 협상의 결론을 내릴 것을 촉구함.
- 이번 회의에서 도출된 내용들은 내년 1월 위원회가 발간할 보고서에 담길 예정임. 가와구치 의장은 이 보고서에서 구체적인 숫자로 핵탄두 감축 목표가 담길 것이지만 감축 목표 연한은 설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함. 일본과 호주 정부가 지난해 출범시킨 ICNND는 핵 비확산 전문가와 전직 국가지도자들이 참여해 핵 비확산을 논의하는 정부 간 기구임.

#### ● 中, 4년후 수륙양용기 개발(10/21)

- 중국은 군사적 목적과 인명 구조 등을 위해 대형 수륙양용기 개발에 착수했다고 중국 영자지 글로벌타임스가 20일 보도함. 중국은 에어버스320 크기의 이 대형 수륙양용기를 오는 2013년께 개발을 완료하고 2015년 대량 생산에 들어갈 계획임. 중국은 중진 수상비행기와 소형 수륙양용기를 개발했으나 대형 수륙양용기 개발은 이번이 처음이며, 세계에서는 미국, 일본, 러시아, 캐나다에 이어 5번째임.
- 프로펠러 엔진을 달고 적재량이 49t인 이 수륙양용기는 대잠수함 작전에 사용되며, 산불 진화 및 해상 인명 구조에 동원됨. 이 수륙양용기는 50명이 탑승할 수 있고, 시속 560km로 최대 5천510km까지 비행할 수 있으며 긴급 의료장비도 탑재할 수 있음.

#### ● 대만, 후진타오-마잉주 회담 3대조건 제시(10/21)

- 대만은 마잉주(馬英九) 총통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 주석간 회담은 상호 신뢰, 대만인의 공동 인식, 선의 등 3대 조건이 충족돼야 비로소 개최될 수 있다고 밝힘. 우둔이(吳敦義) 대만 행정원장(총리)은 20일 입법원(국회)에서 집권 국민당 황즈슁(黃志雄) 입법위원의 질문에 답하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대만 신문들이 21일 일제히 보도함.
- 황 입법위원은 마 총통이 종전엔 ‘선 경제, 후 정치’ 원칙을 지키고 마-후 회담은 생각하지 않겠다고 말하다가 로이터통신과 지난주 단독 회견에서는 회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을 바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음. 우 행정원장은 이에 대해 마 총통은 양안 관계와 관련, ‘대만 위주, 인민에 도움’이라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으며 어떤 것이라도 이에 어긋나면 진행될 수 없다고 말하고 “이 원칙 하에서 양안이 더 많은 선의와 상호 신뢰를 쌓고 양안관계의 평화적 발전에 대한 대만 전체 국민의 공동의 인식이 더 강할 때 비로소 마-후 회담을 진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고 밝힘.



- 황즈슁 입법위원이 이어 마-후 회담이 열린다면 무엇을 논의하고 가장 좋은 시기는 언제냐고 묻자, 우 행정원장은 선의와 상호 신뢰는 양안이 공동 노력해야 하기때문에 가장 좋은 시기를 현재 설정할 수 없으며 대만인 2천300만명이 더 강한 공동의 인식을 쌓았을 때 비로소 회담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함. 우둔이 행정원장은 결론적으로 “공동의 인식과 선의와 상호 신뢰가 만약 충분하지 않다면 마-후 회담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밝힘.

#### ● 中-EU, 다음달 30일 난징서 정상회담(10/20)

- 중국과 유럽연합(EU)이 다음달 30일 중국 동부 난징시에서 연례 정상회담을 개최한다고 EU가 20일 밝힘. EU 베이징 주재 대변인 윌리엄 핑글튼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기후변화와 글로벌 경제 위기 등의 주요 현안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말함. 주제 마누엘 바로수 EU 집행위원장, EU 이사회 순번 의장국인 스웨덴의 프레드릭 레인 펠트 총리, 중국의 원자바오 총리 등이 정상회담에 참여할 예정임.

#### ● 中, 북동부에 비상 석유저장탱크 건설(10/20)

- 세계 2위 에너지 소비국인 중국이 연료 확보를 위해 북동부 지역에 비상 석유저장탱크를 건설할 예정이라고 장궈바오(張國寶)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 겸 국가에너지국 국장이 20일 밝힘. 장 국장은 이날 베이징(北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들 탱크는 정부가 추진 중인 비상 석유비축기지 건설 두 번째 단계의 일환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함.
- 지난달 23일 중국석유천연가스집단공사(CNPC)는 사보를 통해 연료공급이 중단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해 오는 2020년까지 100일분 수입량에 해당하는 원유를 비축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을 전했다. 이에 따라 비축기지가 3단계로 건설되는데, 지난 6월 중국 에너지 당국에 따르면 1단계로 30일간의 수입량에 해당하는 원유가 동부 연안의 원유 비축 장소 4곳에 채워짐.
- 또 장 국장은 지난달 신장(新疆) 위구르 자치구 두산쯔(獨山子)에서 2단계 작업이 시작됐다고 전함. 중국은 지난 10년간 석유수요가 2배로 치솟자 상업용, 군용 원유비축기지를 건설하기 시작함. 국제 원자력기구(IAEA)는 회원국들에 국내 수요의 90일분에 해당하는 원유를 비축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 ● 美장관, 10년만에 대만 방문 추진(10/20)

- 대만 정부가 에릭 신세키 미국 보훈장관을 대만으로 초청했다고 대만 정부 관리들이 20일 밝힘. 그가 대만을 방문하면 2000년 로드니 슬레이터 미 교통장관에 이어 10년만에 대만을 찾은 미국의 최고위 관리가 됨.
- 대만 행정원 국군퇴역장병지도위원회(行政院國軍退除役官兵輔導委



員會) 쩡진링(曾金陵) 주임위원(장관)은 미 육군 참모총장 출신인 일본계 신세기 장관에게 수일전 초청장을 발송했으며 양국 관리들이 현재 그의 방문 시기를 협의 중이며 이르면 내년 봄 방문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날 밝힘.

- 미국측은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11월 중국을 방문하기 때문에 신세기 장관이 내년 봄 대만을 방문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대만 관리들은 밝힘. 신세기 장관의 방문은 오바마 대통령의 대(對) 대만 정책 기초를 보여주는 것이어서 크게 주목되고 있음.
- 4성 장군 출신인 신세기 장관은 대만 방문 기간 퇴역장병 문제 세미나에 참석하는 한편 대만의 국방 문제 등에 대해서도 폭넓게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대만 외교부 신문사(新聞司) 장지핑(章計平) 부국장은 미 고위층이 대만을 방문해 의견을 교환하는 일이 “성사될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고 밝힘.
- 미국이 교통장관에 이어 보훈장관의 대만 방문을 추진하는 이유는 정치적으로 덜 민감한 분야여서 중국의 반발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도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으로 대만 외교 분석가들은 보고 있음.

#### ● 하토야마 사임압력 日 우정사장 퇴진(10/20)

-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총리를 비롯한 일본 민주당 정부의 강력한 사임 압력에 직면한 니시카와 요미후미(西川善文) 일본우정 사장이 20일 오후 사의를 공식 표명함. 니시카와 사장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현직에 머물 수 없게 됐다”고 말해 정부에 사의를 전했음을 시사함. 니시카와 사장이 퇴진할 경우 자민당 정권에서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전 총리가 최대 개혁 사업으로 추진한 우정(郵政)민영화 사업은 완전 좌초함.
- 니시카와 사장은 19일 하토야마 총리, 가메이 시즈카(龜井靜香) 금융·우정담당상 등으로부터 사임 압력을 받았음. 하토야마 정부는 일본우정 계열사의 주식 상장 등 자민당 정권이 만든 민영화계획을 백지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함. 하토야마 정부는 니시카와 사장이 사퇴할 경우 후임자를 모색해 이르면 이달 중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일본우정의 새로운 경영체제를 출범시킬 방침임.

#### ● 아소 전 총리도 야스쿠니 참배(10/20)

- 일본 자민당의 아소 다로(麻生太郎) 전 총리가 지난 17일 1급 전범의 위패가 있는 야스쿠니(靖國)신사를 참배했다고 교도(共同)통신 등 일본 언론이 20일 보도함. 아소 전 총리는 야스쿠니신사 참배론을 견지하고 실제 참배도 했으나 2007년 외상, 2008년 총리 취임 이후는 한국, 중국 등과의 관계를 고려해 참배를 하지 않았었음.
- 또 집권 민주당 의원이 포함된 일본의 중의원 30명과 참의원 24명 등 의원 54명이 20일 오전 야스쿠니신사를 집단 참배함. 이날 야스



쿠니신사를 찾은 의원들은 ‘다함께 야스쿠니신사에 참배하는 국회 의원 모임’ 소속 의원들임. 이 모임 의원들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는 8.30 총선 이후 처음임.

-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총리가 야스쿠니신사 불참배 방침을 밝혔기 때문에 장관과 부장관, 정무관 등 각 부처의 정무 3역은 참배에 참여하지 않았음. 이날 참배에 참가한 주요 의원은 자민당 소속의 에토 세이시로(衛藤征士郎) 중의원 부의장, 자민당 전 간사장인 고가 마고토(古賀誠), 나카소네 히로후미(中曾根弘文) 전 외무상, 하마다 야스카즈(浜田靖一) 전 방위상, 민주당 소속의 다나부 마사미(田名部匡省) 전 농업상 등임.
- 자민당의 다니가키 사다카즈(谷垣禎一) 총재도 19일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함. 참배는 이 신사의 추계 대제에 맞춰 이뤄짐. 자민당 총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는 2006년 8월 15일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당시 총리 겸 당 총재 이래 3년2개월 만임.

#### ● 韓·베트남,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로 격상(10/21)

- 베트남 하노이를 국민방문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21일 응웬 밍 짜엣 베트남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함. 두 정상은 이날 주석궁에서 가진 정상회담에서 지난 2001년 쩌 득 르엉 당시 베트남 국가주석의 한국 방문 때 구축한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이같이 격상하기로 하고 ‘한·베트남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구축을 위한 공동성명’을 채택함.
- 베트남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맺은 국가는 중국, 러시아, 인도, 일본에 이어 한국이 5번째임. 또 우리나라가 전략적 관계를 맺은 나라는 미국, 중국, 러시아, 멕시코, 알제리,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루마니아, EU(유럽연합), 카자흐스탄에 이어 베트남이 11번째임.
- 두 정상은 관계 격상에 따라 외교 안보 국방 분야간 협력과 대화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는 판단아래 외교부 차관을 수석대표로 하고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연례 차관급 전략대화를 신설하기로 합의했으며 양국간 군사교류도 활성화하기로 함.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은 브리핑에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는 정치, 경제, 인적, 문화 교류까지 포함해 전면적인 협력 동반자 관계로 가겠다는 의미”라면서 “양국간에 잠깐 논란이 있었던 과거사 문제는 이미 유명한 외교통상부 장관이 대통령 방문 직전 정리를 다했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에서 특별히 거론되지 않았다”고 말함.
- 양국 정상은 지난해 100억달러 수준인 양국 무역규모를 오는 2015년까지 두배인 200억달러로 확대하기로 합의했고 ‘한·베트남 FTA(자유무역협정)’의 추진 가능성과 실효성을 논의하기 위한 공동작업반 설치 문제에 대해서도 연내 의견 교환을 개시하기로 함. 이 대통



령은 특히 베트남에 대해 시장경제 지위를 인정, 베트남이 한국시장에 수출할 때 반덤핑 제소 등 무역보복에서 다소 자유로운 위치에 설 수 있도록 함.

- 두 정상은 베트남이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홍강 개발사업과 호찌민-냐짱 고속철도 복선화 및 호찌민-껀터 고속철도 신설 사업에 한국기업들의 참여를 보장하기로 명문화함. 홍강 개발사업은 총 70억달러 규모로 이 대통령이 2005년 서울시장 시절 사업개발계획 수립을 지원했고 지난해 1월 한국기업 16개사가 사업개발추진단을 발족시킴. 호찌민-냐짱 고속철도 복선화 사업은 90억달러 규모이며, 호찌민-껀터 고속철도 신설 사업은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 중임.
- 북한 핵 문제와 관련, 두 정상은 평화적 해결을 통한 비핵화가 아태지역의 평화·안정을 유지하는데 긴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했으며 범세계적 문제 해결을 위해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함. 이날 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베트남측의 우호적인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짜엣 주석이 편리한 시기에 방한해줄 것을 요청했고 짜엣 주석은 이를 수락함.
- 이 대통령은 이에 앞서 하노이시 바딩 광장에 있는 ‘베트남 국부’ 호찌민 묘소를 방문, 헌화했으며 농 득 마잉 공산당 서기장, 응웬 쩐 중 총리 등과도 면담함.

#### ● <日 하토야마 정권도 영토문제 집착>(10/20)

- 일본의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정권이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 등을 제기하면서 한국 등 아시아와의 관계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영토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초강경 노선을 견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추이가 주목됨. 민주당이 총선에서 제시한 각종 개혁정책을 전면에서 시행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국토교통상 겸 오키나와(沖繩).북방영토담당상은 지난 17일 러시아와 영토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북방영토에 대해 영유권 주장을 제기, 러일 간 논란이 확산하고 있음.
- 20일 마이니치(毎日)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마에하라 국토교통상은 지난 17일 홋카이도(北海道) 네무로(根室)시의 노삿푸미사키(納沙布岬)를 방문, 해상보안부 순시선을 타고 바다 위에서 구나시리(國後)섬을 둘러봄. 구나시리는 홋카이도와 러시아 캄차카 반도를 잇는 20개 도서 가운데 최남단의 에토로후(擇捉), 홋카이도 북쪽의 하보마이(齒舞)와 시코탄(色丹)과 함께 러시아와 영토분쟁이 벌어지는 북방영토 4개 섬의 하나임.
- 그는 시찰 후 기자들에게 “역사적으로 봐도 국제법상으로 봐도 북방영토는 일본 고유의 영토다. 종전(終戰) 후 어지러운 틈을 타서 불법으로 점검당했다. 4개 섬의 반환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함. 일본



각료가 이 지역을 시찰한 것도 이례적이며, 현 정부 들어 외국과의 영유권 분쟁지와 관련한 각료의 발언도 처음임. 영토문제와 관련해서는 아소 전 총리가 “러시아가 불법점거하고 있다”고 발언해 러시아의 반발을 초래한 바 있음.

- 이에 대해 러시아 외무부는 지난 19일 성명을 내고 “일본의 새 정부가 러시아와의 관계 발전을 위한 긍정적인 뜻을 보이면서도, 용인할 수 없고 부적절하면서 법적인 의미가 없는 발언이 다시 나온 것은 유감이다”라고 강하게 반발함. 이 과정에서 주목되는 것은 마에하라 국토교통상이 북방영토의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역사적으로 봐도 국제법상으로 봐도”라고 언급한 것임. 이는 일본 정부가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할 때 사용하는 표현과 동일하기 때문임.
- 이와 관련, 지난 8·30 총선에서 민주당에 대패해 체제정비를 가속화하는 자민당의 다니가키 사다카즈(谷垣禎一) 총재가 자민당 총재로서는 3년 2개월 만인 지난 19일 야스쿠니(靖國)신사를 참배하는 등 일본내 극우 보수세력이 반격 태세에 나서고 있는 점도 주목됨. 자민당 등 보수세력은 내년 7월 실시되는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 참의원에서의 여소야대를 통한 정국 주도를 최대의 목표로 삼고 있어서 언제든지 영토문제, 역사문제를 전면에 제기하면서 민주당 정권을 공격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임.
- 민주당도 올해 총선에 앞서 발표한 정책집에서 독도와 관련, “우리 나라가 영토주권을 갖고 있는 북방영토,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표현) 문제의 조기 그리고 평화적 해결을 위해 끈기있게 대화를 거듭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서 보수세력의 압력이 강해지면 선거를 의식, 이런 입장을 재확인할 가능성도 있음.

#### ● <李대통령 ‘新아시아 외교’ 본격 가동>(10/19)

- 이명박 대통령은 20일부터 닷새간 예정된 동남아시아 3국 순방에서 지난 6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통해 구체화한 ‘신(新)아시아 외교구상’을 궤도에 올리는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됨. 내년 11월 G20(주요 20국) 정상회의 유치로 세계 강국들 사이에서의 활동 공간을 확보한 데 이어 이번에는 국제사회 신흥세력으로 급부상한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역내 중심국 지위를 구축한다는 구상임.
- 지난 3월 이 대통령이 ‘신아시아 외교’ 구상을 처음 천명할 때만 해도 외교적 수사로 여기는 분위기가 있었지만, 지난 4월 아세안+3 정상회의와 5월 중앙아시아 2개국 순방, 6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거치면서 이러한 구상에 탄력이 붙고 개념도 명료해졌다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임. 이 대통령은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52%), 세계 총생산(GDP)의 5분의 1(10조7천억 달러)을 담당하는 아시아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경제위기 극복과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보고 있음.



- 특히 우리나라는 교역의 48%, 해외투자의 53%, 공적개발원조(ODA)의 47%를 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데다, 아시아 모든 국가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역내 FTA 허브가 된다는 목표를 가졌다는 점에서 신아시아 외교 구상은 실익이 만만치 않다는 분석임. 이동관 홍보수석은 “이 대통령은 금융위기 이후 재편되는 새 국제 질서 속에서 아시아의 역량을 강화하고 역할을 증대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그 실천 의지를 담은 결과물이 신아시아 외교 구상”이라고 말함.
- 이 대통령은 먼저 신흥 개도국으로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베트남과 캄보디아를 잇따라 국민 방문해 자원·에너지 분야의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할 예정임. 특히 베트남과는 8년 전 설정된 ‘포괄적 동반자관계’를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격상한다는 계획임. 또 지난 1992년 수교 이후 교역 규모가 20배나 늘어날 만큼 빠른 성장세를 보인 베트남과의 경제 협력을 더욱 확대하고자 ‘석탄개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원자력과 고속철 등 첨단기술 분야에 우리 기업이 진출하는 방안을 모색함.
- 이 대통령은 또 캄보디아에 이틀간 머물면서 훈 센 총리와외 정상회담을 통해 캄보디아 내 조림지 확보 및 광물자원 공동 연구 방안을 논의함. 우리나라의 대 캄보디아 투자는 97년 재수교 당시와 비교해 75배나 급증했으며, 지난해 캄보디아를 방문한 한국인은 무려 26만 명에 달할 만큼 양국 관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또 이 대통령은 지난 2천년 훈 센 총리의 경제고문으로 위촉됐을 만큼 양국 정상간 관계도 각별함.
- 이 대통령은 이어 오는 24~25일 태국 후아힌에서 열리는 아세안과의 정상회의와 아세안+3 정상회의,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등에 잇따라 참석, ‘신아시아 구상’의 착근을 위한 아세안과의 신뢰 구축에 진력할 계획임. 김은혜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내년 G20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선진국과 개도국간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자 아세안과의 협력 체계를 더욱 긴밀하게 구축할 것”이라고 말함.

#### ● 한·불가리아 26일 정상회담..실질협력 논의(10/19)

- 이명박 대통령은 오는 26일 청와대에서 게오르기 파르바노프 불가리아 대통령과 정상회담 및 국민만찬을 갖고 양국간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한다고 청와대가 19일 밝힘. 파르바노프 대통령은 내년 양국 수교 20주년을 맞아 오는 25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우리나라를 국민 방문할 예정으로, 불가리아 대통령으로서는 지난 1995년 이후 14년만의 방한임.
- 두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정치, 경제, 문화 등 다방면에서 양국간 실질협력 증진 방안을 비롯해 내년 양국 수교 20주년 기념행사 준비,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등에 대해 협의함. 정상회담 후에는 양국간 군사비밀보호협정, 사회보장협정 등에 대한 이행 약정식과 함께 문화



교류 시행계획서 서명식도 열릴 것으로 알려짐. 또 파르바노프 대통령 내외는 이번 방한기간 경주 유적지, 국립중앙박물관 등을 방문하고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등 산업시설도 시찰한다는 계획임.

- 아울러 이번 파르바노프 대통령의 국빈 방한을 계기로 대한상공회의소는 주한 불가리아 대사관과 공동으로 오는 27일 오후 한·불가리아 비즈니스 포럼도 개최할 예정임.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한·불가리아 정상회담에서는 양국간 교역 및 투자 확대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폭넓은 의견교환이 있을 것”이라고 말함.



[참고 1] &lt;표&gt; 월간 남북교역 추이(연합뉴스, 10/19)

(단위: 천 달러)

구 분	반출금액	반입금액	교역규모
2007년 1월	37,097	55,877	92,974
2월	37,433	44,475	81,908
3월	46,442	58,771	105,213
4월	86,756	46,975	133,731
5월	88,458	63,273	151,731
6월	98,909	57,002	155,911
7월	103,134	78,376	181,510
8월	91,600	59,518	151,118
9월	107,026	64,919	171,945
10월	129,325	82,939	212,264
11월	113,129	82,707	195,836
12월	89,279	71,519	160,798
2008년 1월	68,508	69,790	138,298
2월	58,759	60,199	118,958
3월	78,055	79,200	157,255
4월	74,243	78,162	152,405
5월	95,150	76,699	171,849
6월	81,615	64,410	146,025
7월	98,149	81,781	179,930
8월	83,459	78,511	161,970
9월	67,073	99,790	166,863
10월	63,811	99,200	163,011
11월	62,035	79,898	141,933
12월	52,551	69,734	122,285
2009년 1월	42,816	68,512	111,328
2월	41,640	59,251	100,891
3월	40,889	67,684	108,573
4월	40,325	64,721	105,046
5월	42,252	64,265	106,517
6월	52,138	61,011	113,149
7월	63,891	75,525	139,416
8월	53,819	82,809	136,628
9월	74,475	98,703	173,178

(자료=관세청) (서울=연합뉴스)

출처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09/10/16/0511000000AKR20091016155300002>.  
HTML



[참고 2] <한-베트남 정상 공동성명 전문>(연합뉴스, 10/21)

이명박 대통령과 응웬 밍 짜엣 베트남 국가주석은 21일 하노이 주석궁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한국-베트남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구축을 위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다음은 공동성명 전문.

▲한국-베트남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구축을 위한 공동성명

이명박 대한민국 대통령 내외분은 응웬 밍 짜엣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주석 내외분의 초청으로 2009년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 베트남을 국빈 방문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방문기간 동안 응웬 밍 짜엣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으며, 농 득 마잉 당서기장, 응웬 띠 중 총리와도 각각 면담하였다. 금번 정상회담을 통해 양측은 한국과 베트남 관계의 발전을 위한 방안과 지역 및 국제문제 등 상호관심사에 관해 심도있게 의견을 교환하였다.

양국 정상은 1992년 한국과 베트남간의 수교 이래 양국관계가 급속하게 발전해 온 것을 높이 평가하였다. 특히 양국이 2001년 당시 쩌 득 르엉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국가주석의 한국방문시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한 이래 정치, 경제·통상, 사회, 문화,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의 폭이 확대된 점을 평가하였다. 이에 금번 방문시 양국 정상은 양국 관계를 평화, 안정 및 발전을 위해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하고 아래와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1. 정치·안보 협력

양측은 양국의 정상급을 포함하여 고위 인사들간의 상호 교환 방문을 더욱 활발히 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 각종 다자회의 계기에도 별도의 양자회담을 갖도록 노력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정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의회간 교류도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격상된 양국관계에 비추어 외교·안보 및 국방 분야간 협력과 대화를 증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는 인식하에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연례 차관급 전략대화를 창설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양국정상은 현재까지의 방산 등 군사교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양국간 군사교류가 더욱 지속적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2. 경제·통상협력

양국정상은 양국간 교역규모가 1992년 수교당시 5억불 규모에서 2008년에는 20배 증가한 100억불 규모에 이른 것을 높이 평가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2015년까지 양국간 무역액을 200억불로 확대시키기 위해 노력



하기로 하였고 동시에 무역 균형을 위해 함께 협력하고 노력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한국측은 베트남이 지난 20여년의 개혁·개방정책 실시를 통해 시장경제 체제를 발전시켜 온 노력을 높이 평가하였고, 베트남의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무역·투자 등 경제협력을 확대해 나가기 위하여 '한국-베트남 자유무역협정'의 추진가능성과 실효성을 논의하기 위한 공동작업반을 설치하는 것에 관하여 2009년내에 의견 교환을 개시하기로 합의하였다.

베트남측은 한국이 베트남에서 주요투자국임을 높이 평가하였고, 한국기업들이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경영 환경을 개선하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한국측은 한국기업의 베트남 투자를 지속적으로 장려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베트남의 광산자원개발과 가공 분야, 은행 분야, 특히 호찌민-냐짱 구간 복선전철 건설사업, 호찌민-껀터 고속철도 건설사업, 하노이 시내 전철 '남호띠이-응옥카잉-랑-호아락' (5호선) 프로젝트를 포함한 인프라 건설 분야 등에 한국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다. 베트남측은 동 제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약속하였다.

양측은 하노이-홍강 구간 개발기본계획 수립 사업을 하노이와 서울 양수도간의 상징적인 협력 사업으로 인식하였다. 베트남 측은 양측이 동 사업의 세부 계획 수립과 이행과정에서 지속 협력할 수 있도록 사업 검토 및 승인을 가속화하고 한국 기업들의 참여를 보장하며, 베트남은 동 사업을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 3. 개발·과학기술협력

베트남측은 한국의 ODA(공적개발원조) 공여가 베트남의 경제사회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였으며 한국측은 앞으로도 중점협력대상국인 베트남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력을 해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한국의 개발경험이 베트남의 경제발전에 유익하다는 점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양측은 중기발전계획, 금융재정정책, 국토개발계획, 산업기술정책, 과학기술, 인적자원개발, 노동고용, 환경정책, 농촌개발 분야 등에서 구체 지원 사업을 선정하고 개발 경험 공유를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베트남측은 한국의 신발·섬유산업에서의 발전경험, 경영전략수립, 브랜드 개발, 디자인 개발 및 인력 양성 경험 등을 공유하기를 희망하였으며, 한국측은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약속하였다. 양측은 노동·고용 분야에서의 협력 관계를 높이 평가하였다. 양측은 양국 노동관련 정부기관간 직업 훈련, 국가기술자격, 고용 및 산업안전보건 등 분야에서 밀접한 협력관계를 유지해온 점을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도 관련분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정보기술과 정보화, 통신, 방송, IT 인력개발 분야에서 협력과 정보 공유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한국측은 에너지 가격상승과 지구온난화 대처 그리고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베트남측은 녹색성장을 포함한 지속가능한 발전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고, 동 분야에서의 한국의 경험과 기술을 공유하기를 희망하였다. 양측은 경제발전 과정에서의 안정적 에너지 확보차원에서 원자력의 중요성에 공감하였으며, 베트남 측은 자국의 원자력법령과 제도 수립 및 인력양성 등 원자력 기술발전을 위해 한국측이 지원해 준 것을 높이 평가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양측은 향후에도 동 분야에서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 4. 사법·영사 협력

양측은 인적 교류 증대에 부응하기 위해 영사협력을 확대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양국간 사법공조체제 보완 구축을 위해 수형자 이송 조약의 조기 비준 및 민사사법공조조약 체결 추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상대방 국민들을 위해 사증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이행 조치들을 관심있게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양국 우호 협력 관계를 감안하여 한국 거주 베트남인 및 베트남 거주 한국인을 지원하고 그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데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기로 약속하였다.

#### 5. 사회·문화협력

양측은 양국민간의 상호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문화, 관광, 교육, 청소년, 예술, 방송, 스포츠, 인적교류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으며, 양국간 인적 교류, 특히 청소년간의 상호교류가 미래지향적 양국관계 발전에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청소년 교류활성화를 위한 이행 조치를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다.

베트남측은 처음으로 베트남에서 개최되는 ‘Vietnam-Korea Week(한-베트남 주간)’ 기간 다양한 문화행사가 실시되고 있는 것을 환영하였다. 한국측은 베트남측이 하노이 정도 1,000주년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것을 지지하였다. 양측은 베트남과 한국간 문화교류를 더욱 증진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다.

#### 6.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양국 정상은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통한 한반도의 비핵화가 아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긴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6자 회담의 조속한 재개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하였다. 양측은 지난 6월 한국에서 개최되었던 한-ASEAN 대화관계 수립 20주년 기념 한-ASEAN



특별정상회의의 결과를 환영하고 동 정상회의가 한국-ASEAN 협력관계를 점검하고 이를 가일층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였으며, 동 정상회의의 후속조치를 신속히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관련 한국측은 2010년 베트남의 ASEAN 및 ARF 의장국 수임을 축하하였다.

한편, 베트남측은 2010년 한국의 G-20 의장국 수임 및 G-20 회의 개최를 축하하였다. 양측은 한-ASEAN 협력관계, ASEAN+3, ARF, EAS 및 APEC 등 지역협력체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한국측은 향후 동 아시아 공동체 형성을 위한 견실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ASEAN 공동체 창설 과정에서 ASEAN과 긴밀히 협력하고 지원하기로 약속하였다.

양측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 기후변화, 테러리즘, 해적, 마약, 개발 등 범세계적 문제해결을 위한 UN의 역할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UN 등 국제무대에서 계속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특히, 한국측은 베트남이 2008-2009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에 적극적이고 건설적으로 기여해 왔음을 평가하였다.

한국측은 2010년 베트남에서 개최되는 동아시아 포럼(EAF)을 환영하고 성공적 개최를 지지하였다. 아울러 베트남측은 한국의 2011년 원조효과 고위급 포럼과 2012년 여수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양국 정상은 금번 방문 결과가 양국 우호협력관계를 한 단계 격상시키고 발전·강화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인식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베트남측의 우호적인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응웬 밉 쩌엣 국가 주석이 편리한 시기에 한국을 방문해 줄 것을 초청하였으며, 응웬 밉 쩌엣 주석은 초청에 사의를 표하고 이를 흔쾌히 수락하였다.

2009년 10월 21일 하노이

출처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09/10/21/0503000000AKR20091021065800001>.  
HTML



[참고 3] <제41차 SCM 공동성명 전문>(연합뉴스, 10/21)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김태영 국방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은 22일 서울서 제41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개최하고 16개항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미측은 공동성명에서 한반도 유사시 전세계의 가용한 미군 병력과 전력을 증강배치키로 했으며, 확장억제 구현을 위해 핵우산과 재래식 타격능력, 미사일방어(MD) 능력을 한국에 제공키로 약속했다.

다음은 **공동성명 전문**이다.

1. 제41차 한·미 안보협의회의가 2009년 10월22일 서울에서 개최됐다. 동 회의는 김태영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미합중국 국방부장관이 공동 주재했으며 양국의 국방 및 외교분야의 고위관계관들이 참석했다. 동 회의에 앞서 2009년10월21일 대한민국 합참의장 이상의 대장과 미합중국 합참의장 마이클 멀린 제독은 제31차 한·미 군사위원회 회 회의를 주재했다.
2. 양 장관은 2009년 6월16일 ‘한·미 동맹을 위한 공동비전’에 명시된 바와 같이 공동의 가치와 상호신뢰에 기반해 양자·지역·범세계적 범주의 포괄적인 전략동맹을 구축해 나간다는 양국 정상의 공약을 재확인하고 양국간 국방협력 방향과 관련된 조치들의 지속적 발전을 통해 공동비전을 이행·발전시킴으로서 21세기 한·미 동맹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3. 양 장관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용인하지 않을 것임을 재강조하고 2009년 4월과 5월에 있었던 북한의 미사일·핵실험 및 최근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논의했다. 양 장관은 북한의 이런 행위들이 유엔안보리 결의들과 6자회담 합의사항들을 명백히 위반하고 범세계적 비확산 체제를 훼손하며 대한민국과 인근국뿐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위협이라는 것을 재확인했다. 양 장관은 유엔안보리 결의 1718호 및 1874호의 완전하고 충실한 이행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6자회담을 통해 평화적 방법으로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4. 게이츠 장관은 북한의 비핵화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대화를 통해 한반도에서 긴장을 완화하고 ‘상생과 공영’의 남북관계 발전을 추구해 나가려는 대한민국 정부의 노력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 양 장관은 안보환경의 미래도전과 새로운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한 연합대비태세를 확고히 하면서 국방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으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의 유지에 있어 한·미동맹의 중요한 역할을 재확인했다.

5. 양 장관은 공고한 연합방위태세를 통해 대한민국을 방위한다는 한·미동맹의 근본적인 임무 및 상호방위조약에 기반한 상호안보의 증진에 대한 양국의 공약을 재확인했다. 또한, 양 장관은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는 데 있어 양국의 미래 이익을 위해 계속 긴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 연합전력의 충분한 능력을 확고히 유지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게이츠 장관은 한반도에 배치된 전력을 통해서 뿐 아니라, 위기시 세계 전역에서 가용한 미군 병력 및 능력을 한·미연합방위를 위해 전략적으로 유연하게 증강 배치해 대한민국을 방위한다는 미국의 단호하고 확고한 공약을 재강조했다. 양 장관은 이와 같은 공약이 주한미군의 현 수준 유지 공약과 함께 모든 주한미군 장병들의 복무기간을 3년으로 확대하는 복무정상화를 통해 더욱 입증되고 강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6. 게이츠 장관은 미국의 핵우산, 재래식 타격능력 및 미사일방어 능력을 포함하는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해 대한민국을 위해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했다. 김태영 장관은 미국의 이러한 공약에 사의를 표했으며 양측은 확장억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7. 양 장관은 대한민국에 대한 침략을 억제하고 억제 실패시 침략을 방어할 수 있는 공고한 전력과 능력이 확보되도록 필요시 증강 조치를 취해나가면서 미래 연합전력태세에 대해 긴밀히 논의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양 장관은 또한 상호 안보이익을 위한 지역 및 범세계적 기여에 관한 공동비전의 이행을 위해 적절한 준비태세가 유지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8. 양 장관은 한·미동맹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 및 번영을 증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으며 역내 파트너들이 한·미 양국의 상호이익 증진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지역 및 범세계적인 협력적 관계 발전 및 다자간 안보협력 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9. 양 장관은 평화유지활동, 안정화 및 재건지원, 인도적 지원 및 재난 구조를 포함해 광범위한 범세계적 안보도전에 대처하기 위한 한·미간의 긴밀한 협력을 계속 증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 게이츠 장관은 대한민국이 아덴만 및 레바논 등지에서 평화와 안정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점에 대해 사의를 표했다. 김태영 장관은 아덴만 지역에 전개된 한국군 부대의 성공적 임무수행을 위해 미 측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준 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 게이츠 장관은 훈련 및 정보공유 등 PSI관련 활동에 있어 상호지원 및 협력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대한민국 정부의 2009년 5월26일 PSI 승인 및 참여는 대량살상 무기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범세계적 노력에 대한 중요한 협력을 실증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10. 양 장관은 샤프 한·미 연합사령관으로부터 한·미 연합방위태세가 ‘상시 전투준비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어떠한 위협과 도발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는 요지의 한·미 군사위원회 회의 결과를 보고받았다.
11. 양 장관은 한국군에 대한 전작권전통제권 전환이 전략적 전환계획에 따라 예정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한·미 연합사령관의 보고에 의견을 함께하고 2012년 4월17일 전작권 전환에 대한 양측의 의사를 재확인했다. 양 장관은 또한 북한의 위협을 주시하면서 연례 SCM, MCM 회의를 통해 전략적 전환계획의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평가·점검해 전작권 전환과정에 반영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양 장관은 전작권 전환이 조직적으로 이행되어 연합방위태세가 강력하고 빈틈없이 유지되도록 보장해 나가는데 있어 전작권 전환 검증계획이 중요하다는 데 주목하고 한국 합동참모본부의 연합전쟁수행 주도 역량을 보여준 금년 8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의 성공적 결과를 높이 평가하는 한편, 전작권 전환이 완료될 때까지 SCM 회의를 통해 중간검증 결과와 최종 검증 결과를 보고 받아 나가기로 합의했다.
12. 게이츠 장관은 공고한 연합방위가 확고히 유지될 수 있도록 미국은 대한민국이 완전한 자주 방위역량을 갖추기 때까지 구체적이고 상당한 보완전력을 계속 제공할 것임을 재확인하고 동맹이 지속되는 동안 연합방위를 위해 미측의 지속적인 전력을 제공한다는 미국의 공약을 확인했다. 또한 양 장관은 한·미 양국군이 다양한 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연합방어 대응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군사계획과 전략문서 발전에 실질적 진전을 이루었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전작권 전환 기간 뿐 아니라 그 이후에도 강력한 연합방위태세의 유지, 발전 및 준비를 위해 연합연습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13. 양 장관은 지난 1년간 진행된 한·미안보정책구상(SPI) 협의 결과를 보고 받았으며 한·미가 긴밀한 협의를 통해 효과적인 연합방위 보장, 주한미군 기지이전 및 반환 진행, 동맹 미래비전 구체화 등 한·미동맹을 더욱 발전시키는데 있어 중요한 현안을 상당히 진전시키고 있다는 점에 만족을 표명하였다. 양 장관은 지난 5년간의 중요한 성과와 한·미동맹의 지속적 강화에 대한 상호의지를 기반으로 2010년과 그



이후에도 SPI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14. 양 장관은 주한미군 기지이전 및 반환의 진전 상황을 평가하고 이러한 협력적 공동노력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완료가 양국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기지 이전 및 반환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양 장관은 사업상의 도전 요인을 최소화해 나가면서 용산기지이전계획(YRP)과 연합토지관리계획(LPP)의 신속한 완료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양 장관은 기지 반환을 위한 양자간 협력을 촉진시키기 위해 2009년 3월 공동 환경평가절차(JEAP)에 합의한 데 대해 만족을 표명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하야리아 기지를 포함한 7개 시설들의 반환이 완료될 수 있도록 동 절차가 성공적으로 적용되기를 기대했다.
15. 양 장관은 2009년 1월15일 서명되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유효한 제8차 방위비분담 협정에 만족을 표명하였다. 게이츠 장관은 대한민국의 방위 분담이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사의를 표했다. 양 장관은 새로운 방위비 분담협정이 연합방위태세 향상 및 한·미동맹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양측은 최근 합의된 현물지원 제도의 이행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16. 게이츠 장관은 김태영 장관에게 대한민국정부가 자신과 미국 대표단에 보여준 예우와 환대 그리고 성공적인 회의를 위한 훌륭한 준비에 대해 사의를 표하였다. 양 장관은 제41차 SCM과 제31차 MCM에서의 논의가 한·미동맹 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으며 양국간 국방관계의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의 발전을 증진하였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양 장관은 제42차 SCM을 2010년 상호 편리한 시기에 워싱턴 D.C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threek@yna.co.kr

출처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09/10/22/0503000000AKR20091022093800043>.  
HTML